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책임자 | 황병덕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책임자 | 황병덕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관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9,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 황병덕.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08)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32-9 93340 : ₩9,000	
349.42012-KDC4	
327.73051-DDC21	CIP2005002829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3
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	3
나.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안보	7
2.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15
II.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질서	21
1.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구조와 중국의 부상	23
가.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불균등 성장	23
나. 불균등 성장 : 중국 부상	27
2. 미·중 패권경쟁의 이념적 토대와 미·중의 동아시아 안보정책	31
가. 패권갈등의 이념적 토대	31
나. 미국의 대중 안보정책과 중국의 대미 안보정책	40
3. 향후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망	62
가. 미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	62
나. 미·중 패권갈등 구도	69
4. 동아시아 국제 안보질서의 성격과 그 변화 추이	82
가. 동아시아 국제질서 : 불균형적 양극체제	82
나.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 추이	95

Ⅲ. 우리의 대응전략	101
1. 기존의 안보전략에 대한 비판	103
가. 기존의 안보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103
나. 유럽 안보공동체 모델의 동아시아 적용 가능성과 한계	111
2. 향후 동아시아 안보전략	121
가. 기본방향	121
나. 미래형 동북아시아 균형자의 가능성과 한계	130
다. 내재적 균형화전략	731
라. 외재적 균형화전략	142
마.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154
Ⅳ. 결 론	167
참고문헌	180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9

표 목 차

<표 II-1> 동북아 국가별 국력지표	84
<표 II-2> 미·러·중 핵전력 현황	88
<표 III-1> 국제안보질서의 유형	158

I

서론

1. 연구목적

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

한스 모르겐소는 2천년 동안 한국의 국가안보를 “한국을 콘트롤하는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지녔던가, 또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 존재하는지”의 함수로 파악하였다.¹ 한반도 안보에 대한 모르겐소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 패권적 질서가 존재하여 특정국이 패권국 기능을 행사하고 한반도는 여기에 편승할 경우 국가안보가 보존되었거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었을 경우 한반도 안정이 유지되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랫동안 중국이 패권적 지배력을 행사했던 시기 한반도는 중국에 대한 편승전략을 구사하여 종속적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즉, 과거 일본, 서양세력 등의 해양세력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15세기 이전 한반도 안보는 기본적으로 중국왕조와 선린관계 및 조공관계에 의거하여 대륙의 패권국 중국에 편승(bandwagon)하는 한편, 중국의 패권적 정치이념 및 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중국과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가 중국의 패권왕조의 교체과정에 잘못된 국가전략을 추구했을 경우 한반도의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예컨대 중국에서 송나라가 쇠퇴하고 원

¹ Hans J. Morgenthau,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1985), pp. 196~197.

나라가 중원을 차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던 경우 또는 명·청 교체기에서 한반도는 중국대륙의 세력전이에 따른 편승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중화주의의 이념적 정향성을 고수함으로써 원·청의 한반도 침공을 자초하여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또는 고구려의 경우가 시사하는 것처럼 중국과 버금가는 국력을 육성하여 상당 정도 세력균형을 이룩했을 경우 상당 기간 동안 한반도는 자주적 독립성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 고구려의 경우는 패권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중국에 대해 편승하기 보다는 오히려 균형화전략 을 통해 다른 극을 구성하는 안보정책을 추구하였던 사례이다.

근대화와 서세동점의 역사가 진행된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별도로 서양세력, 일본 등 해양세력이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은 중대적 전략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자체적 안보역량, 대외적 동맹관계를 한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세력균형 여부, 세력전이를 통한 세력균형상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한반도 안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의 패권경쟁은 심각한 분쟁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으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조선왕조의 안보역량은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극도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였다. 이 결과 한반도는 주권상실과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고, 주권회복 이후에도 한반도 내부의 이념적 분단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패권적 갈등과 서로 어우러져 민족분단, 한국전쟁 등의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기간 동안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대륙세력

과 해양세력 간의 세력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보전될 수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가 일초다강 체제 형태로 세력균형이 구성되었으나, 그 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반한 미·중간 세력전이 발생으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는 또 다시 심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한반도 안보상황은 한반도 자체의 안보역량 및 대륙·해양의 자체적 세력 교체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세력 및 해양세력의 세력균형의 관계 변화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반도 국가안보의 취약성은 한반도가 대륙세력 및 해양세력 간의 세력경쟁의 전략적 요충지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약소국이나 중위국의 안보환경은 많은 경우 지리적 위치에 의하여 좌우된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강대국 간의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컨대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되는 지역인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거리 등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제1, 2차 세계대전 등 유럽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핀란드가 독일의 동맹국이 되어서 러시아 공격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러시아는 항상 핀란드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도록 노력하였다. 더욱이 독일과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폴란드 역시 전략적 위치 때문에 핀란드보다 훨씬 많은 안보위협에 노출되었다.² 이에 비해서 스웨덴, 포르투

²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둘러싸인 스위스가 독립성을 유지했던 이유는 우선 독일, 프랑스의 분쟁 발생 시 벨기에가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했으며, 알프

갈, 칠레, 뉴질랜드 등은 강대국 분쟁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 등과 같은 강대국간 분쟁으로부터 상당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따라서 약소국이나 중위국의 지리적 위치가 강대국과 떨어져 있을수록 전쟁 및 정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크다.³ 약소국이나 중위국들이 일개의 강대국과 국경을 인접했을 경우보다 많은 강대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때 강대국들의 세력경쟁으로 인한 안보위협은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 이외에도 약소국과 중위국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안보위협은 현재의 산업화 단계에서 긴요하게 필요하지만 대체가 쉽지 않은 천연자원 보유 여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19세기 천연고무, 면화, 양모 등의 천연자원 보유국들은 그 당시 대체가 불가능한 천연자원이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열강의 원자재 확보경쟁에 의해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요즘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석유자원 쟁탈로 중동에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도 강대국들의 대체불가능한 천연자원 확보로 인한 세력경쟁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주변 4강에 둘러 싸여 있는 한반도는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세계 4대 강국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세계 어느 약소국이나 중위국들 보다도 안보위협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는 적은 국토면적과 용이한 접근성

스의 험준한 산악지대의 이점을 지녔고 무장 중립 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³ Fox William T. R., "Small State's Diplomacy," Stephen D. Kertesz and M.A. Fitzsimmons eds.,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South Bend,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59), pp. 349~350.

때문에 적국 군대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적 단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주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은 불균등 성장으로 인한 세력전이의 높은 가능성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최근 한반도는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남한과 북한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 간에 벌어지는 제2기 냉전의 전초기 지로서 한반도 국가안보는 극심할 정도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안보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중요한 전략 환경의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다.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역사적 유산, 지역안보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대만·북한문제, 그리고 미래 동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간 세력경쟁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및 야슈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역내 국가들의 민족주의 성향 대두는 과거유산이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 동아시아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 북한 핵문제, 대만문제 등은 동아시아 안보질서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거 냉전시대의 유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불안 요인들은 과거에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반 위에서 취해진 대외정책과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제

국주의, 동서냉전 등이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즉,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단순히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역내 국가들의 정책적 결과물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유·무형의 자원과 행위자들의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안보질서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토대로 역내·외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타협·충돌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진화·발전될 것이다. 탈냉전 후 형성된 세계질서에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밑받침으로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패권국이라고 볼 수 있다. 패권(hegemony)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어떤 국가가 그 체제 속에서 다른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한다. 길핀(Robert Gilpin)은 패권을 하나의 강대국이 그 체제 내의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제관계를 관리할 규칙과 제도를 형성·지배하는 국가를 패권국(hegemonic power)이라고 정의하였다.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밑받침으로 국제정치질서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패권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제체제가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단극체제인지 아니면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강대국이 함께 국제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적 차이가 있다. 예컨대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양극구조의 냉전체제가 끝난 뒤 국제체제는 걸프전 시기 잠시 단

⁴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29.

일체제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바야흐로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나이(Joseph Nye) 역시 현 국제질서에 대해서 헌팅턴과 유사한 평가를 한다. 나이는 미국이 ‘우세한 국가(preponderant power)’이지 ‘지배국가(dominant power)’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윌포스(William Wohlforth)는 현 체제가 의심할 여지없는 미국의 패권체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패권체제는 안정적인 뿐 아니라 오랜 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⁵

반면, 미어셰이머(Joan J. Mearsheimer)는 해양의 차단력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global hegemon)는 존재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후, 현재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일 뿐, 세계적 차원의 패권국은 아니라고 말한다.⁶ 다만 역사상 유일하게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에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이 대두되는 것을 원치 않는

⁵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p. 37; Joseph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July/August 1999), p. 24; William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Summer 1999), pp. 5~41.

⁶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한국어 번역본 John J. Mearsheimer, *강대국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출판), p. 700. 미국이 세계적 차원의 패권국가라면 동아시아에서의 안보경쟁이 발생할 수 없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항하는 강대국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들은 보복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본토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좌절시킬 수 있는 군사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안보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구적 차원의 패권을 소지하지 않고, 다만 아메리카 대륙에 한정된 지역패권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대륙의 세력균형에 개입하는 우세국가(preponderant power)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이 상호 견제를 통한 세력 균형을 이룰 경우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의 안보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미국은 빌헬름 독일황제, 히틀러 독일, 제국주의 일본, 소련 등과 같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이 등장할 경우 일차적으로 지역 강대국들(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세력균형정책을 관망하다가 이들의 잠재적 패권 국가들에 대한 반패권정책이 실패할 경우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였다. 즉, 미국은 유럽 및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지역패권을 추구할 경우 패권 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봉쇄정책, 전쟁 수행 등의 균형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다.⁷

이러한 측면에서 탈냉전 후에도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유럽 및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방지하는 데 대외정책의 핵심적 목표를 두었다.⁸ 탈냉전 후 아시아에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아시아 대륙,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일초다극의 세력균형체제는 파괴되고, 다른 형태의 국제질서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탈냉전 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아시아의 세력균형체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지역패권국이

⁷ *Ibid.*, pp. 106~109.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미국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우선은 일본에게 중국견제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구사(Buckpassing)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⁸ 1992년 미국 국방성 문건은 “...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과거 소련의 위협에 버금갈 정도의 새로운 경쟁국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 우리의 전략은 장차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지도 모를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cerpt from Pentagon’s Plan: ‘Prevent the Re-Emergence of a New Rival,’” *New York Times*, March 8, 1992.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꼽힌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패권경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지역패권을 우려하는 중국 위협론의 배경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경제력을 밑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충함으로써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 것으로 판단하는 논리도 깔려 있다. 탈냉전기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계패권 및 동아시아 지역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하고, 21세기 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동아시아를 꼽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또한 일본은 2001년 방위백서에서 미사일 현대화 및 해군 현대화 등 중국의 군비확충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였다.

현재 중국 GNP 규모가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20년 전후에는 미국의 경제력과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갖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 의회보고서의 2000년 PPP(구매력지수)에 따른 GDP 통계를 보면, 미국(9조 9660억 달러: 1위), 중국(5조 6940억 달러: 2위), 일본(2조 9530억 달러), 빠르면 2007년 경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본다.¹⁰ 1890년대 이후 세계 최대 국력을 차지하는¹¹ 미국이 향후 20년 전후에 중국에게 세계

⁹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MR-1315-AF (Santa Monica: Rand, 2001); L. M. Wortzel,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 Power Status,” *Orbis*, Vol. 38, No. 2 (1994), p. 157.

¹⁰ Wayne M. Morrison, “China’s Economic Condition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November 19) <<http://fpc.state/document/organisation/10904.pdf>>.

1위 자리를 내준다는 가정은 동북아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미·중간 국력의 변화에 따른 세력권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미·중간 패권갈등이 패권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탈냉전 후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냉전 후 아시아의 세력균형체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지역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서 냉전의 양극체제가 탈냉전 후 미국중심의 일초다강 구도로 전환되었으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 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견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일초다극의 세력균형체제는 파괴되고, 미·중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 등의 국제질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 양진영의 냉전이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세력경쟁으로 이어져 한국전쟁 및 월남전으로 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미·중 패권경쟁도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대립과 모순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은 국제경제 질서, 국제안보질서 개편 등과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미·중간 전략적 이익이 충돌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일차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석유자원 확보 및 해상수송로 확보 경쟁, 한반도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충돌 등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¹¹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February 1993).

국제 경제질서가 비록 미국의 패권적 이익이 관철되어 있으나 상당 부분 후발산업화를 추진하는 중국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경쟁은 세계적 차원의 국제경제 질서와 관련되어 전개되지 않고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미·중 패권경쟁은 석유자원 등과 같은 원자재 확보경쟁과 더불어, 미래의 잠재적 패권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른 유라시아 대륙의 안보질서와 지정학적 이해관계 등을 매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 남북한 통일문제 등을 포함하여 한반도 안보문제 역시 상위체계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과 상호 결합되어 그 향방이 결정되거나, 미·중 패권경쟁의 결과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에 의해 규정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탈냉전 후 미·중 패권경쟁 진행과정 구도 및 이에 따라 형성될 동아시아 질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동인이므로 미·중 패권경쟁 및 이에 따른 동아시아 향후 안보질서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는 우리의 국익증진을 위해 필요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미·중 패권경쟁 및 향후 동아시아 질서 관련, 참여정부 역시 개념계획 5029 및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 입장 표명, 동북아 균형자론 개진 등을 통하여 과거 냉전체제에 고착되어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시도하는 한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통한 내재적 균형화전략(internal balancing)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중 패권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 역시 구체적 대응전략 부재로 인하여 국내외 보수진영의 집중 포화를 받고 표

류하고 있으며, 학계 또한 과거 냉전체제 안보질서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 냉전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패권경쟁 구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있고, 기존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극히 미미하고,¹² 해외연구 역시 그 성격상 추상적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³ 따라서 본 연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미·중 패권경쟁에 의한 동아시아 향후 안보질서 전망과 우리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전략 제시를 연구 목표로 한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북한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¹² 김우상, “미·중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이 논문은 이 분야에서 개척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미·중 관계의 패권경쟁적 성격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이삼성은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한·미동맹을 연성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이삼성, “주한미군 전략의 변화와 한·미동맹 양식의 전략적 재검토,”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¹³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76, No. 2 (March/ April 1997); Thomas J. Christensen, “Posing Problem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 No. 4 (Spring 2001); Gerald Segal, “East Asia and the ‘Constraint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20, No. 4 (Spring 1996);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L. M. Wortzel,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 Power Status,” *Orbis*, Vol. 38, No. 2 (1994), p. 157;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eds., *Mastandun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Muthiah Alagappa eds.,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국력의 급격한 신장에 의하여 미·중간 세력분포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변화될 경우와 미국과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연구 목표로 삼는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미·중간 패권경쟁 및 동아시아 향후 국제질서 전망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관계가 향후 10년 이내에 미·중간 급격한 세력전이에 의하여 중대한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본다. 10년 전후 구매력 지수에 의한 미·중 국력 격차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면 협력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은 10년 전후 시점에 미·중 간 직접적인 패권전쟁 및 대리전(proxy war) 등의 분쟁상황에 들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자안보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정적 양극체제를 구성하든지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략 10년 전후 시점인 2015년 전후를 미·중 패권경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에서는 우선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미국중심의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강대국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 위에서 미·중간 세력전이의 근본원인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구조적 동인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국내외적 억제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미·중 세력전이 전개과정을 예단한

다. 비역사적 현실주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분석방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중의 동아시아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 예컨대 패권전략에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국내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동원 가능성(미국의 예외주의, 중국의 중화주의)과 더불어 국내정치적 상황 등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제2장 후반부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미·중의 동아시아전략 분석을 위하여 우선 과거 1990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을 검토해봄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사활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추론해 보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정치·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부합·충돌하는 영역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의 토대 위에서 탈냉전 후 클린턴 정부의 동아시아정책 및 대중국정책의 기본방향을 분석하고,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 및 대중국정책과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어서 과거 중국의 동아시아정책 및 미국정책의 기본방향을 우선 살펴본 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동아시아정책 및 대미정책의 핵심내용인 “경제발전과 안보의 조화”로 표현되는 반패권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세력균형정책으로 국방 현대화전략과 더불어 반패권정책으로의 다극화전략을 고찰한다.

앞에서 거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중 패권경쟁이 패권갈등 및 위기로 발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자간 안보협력 등의 안보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경우 미국의 향후 동아시아정책의 추진방향을 다양하게 추론하고 이에 대한 중국 및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질서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지역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균형자 역할, 동아시아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공세적 수정주의 전략, 패권경쟁 전개 방향에 따라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예방전쟁 등에 대한 역내국들의 대응전략을 추론한 다음,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적 질서, 중국중심의 패권적 질서, 제2의 냉전과 유사한 미·중 양극체제, 다극체제 및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보 공동체 가능성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제3장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한국의 안보전략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이러한 안보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유럽 안보공동체 형성의 제반 조건과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 조건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미국중심의 일초다강 구도에서 미·중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향후 동아시아정책의 추진방향을 다양하게 추론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질서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지역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균형자 역할, 동아시아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공세적 수정주의 전략, 패권경쟁 전개 방향에 따라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예방전쟁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추론한 다음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적 질서, 중국중심의 패권적 질서, 제2의 냉전과 유사한 미·중 양극체제, 다극체제 및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보 공동체 가능성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의 인식론적 출발점으로 현

실주의적 시각을 기본으로 하면서 신기능주의 및 구성주의 시각을 보조적 분석수단으로 삼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정책대안으로 미국의 현상타파적 동아시아 전략을 현상유지적 전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균형적 양극체제로 변화시키도록 자주국방 추진, 한·미동맹의 수평적 동맹으로의 변화 등 다양한 균형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사회 연대를 촉진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적대적 세력균형”을 “친화적 세력균형”으로 변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냉전 후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대한 추상적 논의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 시각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 수준을 미·중 패권경쟁과 주변 역내 국가들의 대응전략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아서 추상적 논의 수준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세력전이 이론, 패권안정 이론 등의 패권변화 이론의 이론적 패러다임 확립에 학문적 공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학문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계에 학문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켜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를 촉발시키는 한편,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각성과 함께 우리 안보환경을 개선·유지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에 경종을 울리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본 연구 결과는 과거 냉전체제의 유산인 한·미동맹,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설정 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가전략도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전략적 의미를 음미

해 보고, 지식인적 혁신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국가 전략을 창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질서

1.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구조와 중국의 부상

가.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불균등 성장

패권(hegemony)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어떤 국가가 그 체제 속에서 다른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정치학에서 패권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우선 일반적 패권 개념은 지배국가에 의한 물질·비물질 자원의 배분과 등치되며, 따라서 패권은 항상 단극체제를 의미한다.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비물질적 힘의 배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배적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¹⁴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킨들버거는 패권은 국제제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권국가는 자신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게임의 원칙을 형성·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국제질서 속의 패권국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관계를 관리할 규칙과 제도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패권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력을 토대로 정치경제적 국제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유지해나가는 의지를 행사할 경우 패권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킨들버거는 패권국가가 무정부상태인 국제체제에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선의의 전제자(benevolent despot)로 보는 반면, 길핀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질서를 강제력 있는 지도력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세 번째 형태의 패권개념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패권(hegemony)

¹⁴ Stephen D. Krasner,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28 (1976).

¹⁵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 29.

개념에 근원을 두고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패권(hegemony) 개념은 동의와 강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배집단은 물리력을 가지고 피지배집단의 행위를 강제하는 동시에, 정치·경제·문화적 제 수단을 통해 피지배집단의 (적극적) 동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이론에 원용하면, 패권안정이론이 이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패권국가는 무정부적 국제질서에 다양한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응징하는 동의와 강제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⁶ 이 경우 패권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한편으로는 군사·경제력과 같은 강성권력을 동원하여 국제질서에 순응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 실리 제공 등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여 국제질서를 유지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국제정치질서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패권국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 가트체제, 유엔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여 응징하면서 국제질서를 미국의 지도 아래에서 재생산해 왔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양극체제가 냉전 종식과 더불어 막을 내린 이후 국제질서는 미국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현 국제체제가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단극체제인지 아니면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강대국이 함께 국제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체제인지에 대

¹⁶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해서는 시각적 차이가 있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비록 완전무결한 ‘패권국’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패권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적으로 국제체제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협조 하에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현재의 국제체제가 ‘미국 중심체제’ 또는 ‘미국 지도체제’임은 틀림없다.¹⁷

그러나 이러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도 영원불멸의 지속성을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패권적 국제질서 내부에는 경제적 불균등 성장, 과학기술의 불균등 발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국력분포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제질서 틀을 흔들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낳기 때문이다. 예컨대 길핀은 경제, 기술, 군사력 등 국가간의 힘의 불균등 성장 때문에 국제질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특히 패권국은 자국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설명한다.¹⁸ 국력분포에 따른 세력 전이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정당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제체제는 헤게모니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동요하게 되고 또 다른 세계대전의 가능성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¹⁹

국제질서 참여국들 간의 경제적 불균등 성장의 핵심적 요인은 경제의 자본축적 양식과 국제분업의 성격에 의해서도 규정된

¹⁷ 김우상, “미·중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 pp. 7~9.

¹⁸ 윤영관, “패권국가와 국제정치경제 질서,”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p. 266.

¹⁹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p. 9~15;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다.²⁰ 예컨대 영국 중심의 국제체제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산업생산력의 발전 속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률 자체가 생산력 증가율에 못 미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에 시달렸다. 더욱이 섬유제품 등 경공업 제품 생산중심의 산업구조는 양모, 면화 등 원자재 수입을 유발시켜 이들 국가들은 전형적인 1차 상품 수입국이었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은 자국의 상품과 원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민지 및 반식민지 경략에 나서게 되었다. 이 결과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식민지·반식민지 쟁탈을 위해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사이에 발생한 제국주의전쟁이 바로 제1차·2차 세계대전이다.

반면,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는 체제 내부에서 경제적 불균등 성장을 자체적으로 초래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은 생산성 향상이 높은 포오디즘 기술을 생산과정에 체화시키고, 유효수요 부족을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통한 임금상승률 제고로 해결하는 한편,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상당 부분 화학섬유, 화학고무 등의 화학원료로 대체시킴으로써 주변국들을 식민지·반식민지화시키는 제국주의적 수탈을 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더욱이 후발국들은 과학혁명을 통해 이룩해야 하는 기술력을 국제경제 질서의 자유화를 통해 손쉽게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선도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손쉽게 축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후발국들은 저임금과 선도국의 저수준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에서 획득한 외화를 자본재 수입에 활용하여 높은 단계의 산업화를 달성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받는 등 선도국

²⁰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출판사, 1992), pp. 259~271.

과 달리 국제경제 질서를 산업화를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발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로 대만, 한국, 싱가포르는 물론, 1980년대부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중심의 현재의 국제체제는 영국중심의 국제체제보다 훨씬 더 빨리 경제적 불균등 성장을 가져와 패권국과 경쟁국간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다른 경쟁국들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경제구조 특성 때문에 급격하게 잠식당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헤게모니 경쟁·대립 국면이 대두될 것으로 분석된다.

나. 불균등 성장 : 중국 부상

미국과 중국은 1972년 상해 공동성명의 발표를 기화로 소련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소련 붕괴 등으로 미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요인은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련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소멸되었다. 반면,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21세기에는 중국이 군사대국화를 이루고, 이를 포괄하는 이념적 토대로는 중국식 발전모델과 중화민족주의로 무장할 것으로 간주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

되었고, 서방세계와 중국사회 내부에 형성된 국가 정체성간의 갈등관계가 폭발하면서 중국위협론은 서방세계 특히 미국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탈냉전기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계패권 및 동아시아 지역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하고, 21세기 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동아시아를 꼽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²¹ 또한 일본은 2001년 방위백서에서 미사일 현대화 및 해군 현대화 등 중국의 군비확충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토대로 하는 군비 증강에 따른 중국위협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선 먼저 지적되는 점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주화가 추진되어야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발전은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다원주의 성향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권위주의 발전모델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이외에도 부분배의 지역적·계급적 불평등 증가 등의 사회적 요인이 중국 권위주의 발전 양식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²² 또한 중국은 향후 경제성장을 위하여 산업구조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양의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기업자산의 65%를 차지하면서도 엄청난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는 국유기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

²¹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²² 위주야오, “1978년~2020년 중국경제발전의 회고와 전망,” p. 318.

능하다고 주장하는 논점에는 후발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의 세계시장과 후발산업화간의 연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식상의 오류이다.

과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시아 4개국이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데에는 앞에서 논의한 미국중심의 국제경제질서에 기반한 특이한 발전 모델, 수출주도형 권위주의 발전양식에 힘입은 바 크다. 동아시아 4개국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산성이 없어서 폐기된 저준위 기술과 저임금을 결합하여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여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를 다시 선진국으로부터 높은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시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권위주의적으로 억압하고, 자원분배 역시 권위주의적으로 배분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모델을 회고해보면 약 1인당 국민소득 7,000달러 이후에서야(한국의 경우) 비로소 민주화 과정이 시작되었고, 축적모델은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전후에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국내정치적 위기상황 발생은 가능할지 몰라도 향후 20년 내외의 기간을 지나야 비로소 체제위기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미국과 벌이는 패권경쟁이 패권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의 권위주의체제는 중화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발 선진국들은 콘트라티에프 장기파동이론에 의하면 자본축적 과정이 20~25년 주기로 확대기와 신축기를 교대로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1930년대 대

공황 이후 25년 전후의 확대기를 거친 미국 경제는 장기불황에 진입하다가 1980년 이후 지식기반 경제 덕택에 다시 장기호황을 구가하였다. 이러한 장기호황은 2000년 전후를 정점으로 쇠퇴하여 다시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향후 미국의 장기불황은 약 20년 전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축적 과정이 기술혁신 과정과 분리되어 있는 후발 국가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의 장기파동 과정과 상대적으로 유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장기파동 이론은 기술발전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나, 후발국가들은 일정 정도의 발전 단계까지는 세계시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수입하여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은 동아시아에서 향후 변화될 경제적 세력분포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주변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전후까지는 한국, 대만 등의 국가가 한 것처럼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은 장기불황기를 맞이하여²⁴ 중·미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급속도로 축소되고, 미국과 중국의 GNP 격차는 10년 내외 기간 안에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러한 경제력 역전은 군사력 부분에도

²³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참조.

²⁴ 최근 미국경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고용창출이 약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미국경제를 추동하였던 정보통신 기술력 자체가 고갈되어 점차 평준화되고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는 장기불황의 초입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미국경제 흐름과 향후 전망” <<http://www.seri.org/file/DB/2040403.pdf>>.

²⁵ 중국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고, 미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되고 있다.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에 관한 미·중간 환율 갈등과정에서 미국은 중국 위안화가 시장 가치보다 최소한 40% 정도 절상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과 미국경제의 장기불황과 더불어 양국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조정되면 양국간 경제 격차는 예상외로 빨리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현격하게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중국이 군비 증강에도 적극 나설 경우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세계체제 편입적 산업화는 상당한 정도의 산업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커다란 경제위기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중국정부는 중화민족주의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발전의 지역편차 등의 산업화 부작용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위기를 최소화시키면서 미국의 공세적 중국견제에 강력하게 대항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중심의 국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 가운데 생산력 이전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토대로 종합국력 제고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소지할 경우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는 세력전이로 인한 강한 패권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미·중 패권경쟁의 이념적 토대와 미·중의 동아시아 안보정책

가. 패권갈등의 이념적 토대

국제체제 내부에서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패권국에 대한 경쟁국의 도전의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전국의 강한 도전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의지에 비해 패권국의 패권 수호의지가 약할 경우 패권적 갈등상황은 도래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중심의 국제체제가 영국과 미국간의 전쟁과 같은 갈등 없이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로 용이하게 전환되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헌틴톤 문명충돌론이 시사하듯이 동질적 문화를 지닌 국가들이 패권경쟁을 할 경우 패권전이 가 갈등 없이 수행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 문화를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더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저에는 자기중심적 가치체계가 내포되어 있다.²⁶ 미국의 대외정책기조에는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리는 선민주의적 서구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전략에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중화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예외주의의 경우 인류역사의 발전 단계 중 최고의 단계에 도달되어 있는 서구문명 최상주의로 무장하면서 이를 다른 미개한 나라로 수출하여 이들 국가를 서구화하고 민주화해야 하는 ‘소명감’을 지니는 보다 공격적인 가치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청교도적 소명감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퓨리탄 정신, 어떠한 이념적 정치사상의 투과를 허용하지 않는 증산층 자유주의, 덕성과 타락의 대결로 보는 급진적 공화주의 등은 모두 미국의 도덕적 우월감, 주체와 객체간의 선악의 이분법적 판단, 악의 세계를 선의 세계로 탈바꿈하기 위한 미국의 소명감 등을 기반으로 하면서 미국 예외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이룬다.²⁷

²⁶ 구성주의에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문화적 내용과 정치규범으로 규정되는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이 국제관계 및 특정국가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²⁷ 백창제, “미국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제9권 1호 (2003),

미국 예외주의로 표현되는 선민주의는 또한 서구중심주의로 주장되어 있다. 유럽에서 발생한 근대문명이 서세동점하면서 서구 근대문명이 주류 문명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서구문명은 발전되고, 바람직한 문명으로 고착되고, 비서구문명은 저발전되고 미개한 문명으로 치부된다. 서구중심주의 사고방식은 근대 들어서 세계의 패권문명으로 등장한 서구문명이 신봉하는 세계관, 규범 및 가치관을 보편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구중심주의는 유럽대륙 및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문명이 인류역사의 발전단계 중 최고의 단계에 도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구문명의 발전 경로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등 모든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역사발전의 저급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서구 국가들도 서구문명을 모방·수입하여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⁸ 서구중심주의에는 인종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19세기에 제기된 다윈의 진화론은 서구인의 인종적 우월감에 새로운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것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론을 통하여 인종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미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서구중심주의적 인종차별주의는 그 동안 흑백갈등, 황인종 멸시풍조 등으로 표출된 바 있다. 이러한 서구중심주의에는 백인우월 인종주의, 서구 우월주의, 보편주의·역사주의, 근대화 등의

pp. 129~130.

²⁸ 강정인·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 중화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학회보, 제40집 3호 (2000), p. 104. 유럽의 근대 사상가들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우월성을 궁극적으로 정치조직과 경제제도의 차이에서 구했다. 18세기 초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아시아국가의 특징을 유럽 봉건제 보다 열악한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로 규정하고,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독일의 헤겔, 맑스, 비트포겔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핵심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서구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 자유주의 등으로 무장된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²⁹ 북미대륙에서의 팽창정책과 미서전쟁은 “명백한 소명”(Manifest Destiny)으로 인식· 정당화되었다.³⁰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고립주의로 먼로주의는 부패로부터 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동서냉전의 공산주의 봉쇄정책은 공산주의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부터 지고의 선을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소명의식의 발로로 분석할 수 있다. 탈냉전 후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주도의 서구문명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서구중심적 신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화” 명제를 내세워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의 서구화를 강력 추진하였다. 부시 행정부 역시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군사우선주의를 보이고 있다.³¹

전통적 보수주의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면, 특히 미국 예외주의의 전형인 신보수주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해야 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²⁹ 백창제, “미국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p. 129~130.

³⁰ Perry Miller, *The Life of the Mind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 (Harcourt Brace, 1965), p. 49.

³¹ 흡스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문명화를 위하여 전쟁을 악을 구축하고 선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신보수주의는 민족· 국가· 주권 등이 자칫 전체주의와 독재체제를 비호하는 보호막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들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개입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념과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2003).

신보수주의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나타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국익에 배치될 경우 동맹국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미국만의 단독적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일방주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서구 우월주의, 보편주의, 강한 소명의식 등에 입각한 미국 예외주의가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는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에 잘 나타나 있다. 헌팅톤은 세계문명권을 유럽과 미국의 서구문명, 서구문명에 적대적인 중화문명과 이슬람문명, 양대문명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문명, 러시아의 동방정교문명, 인도 힌두문명 등의 그네문명 등 3 종류로 분류하고, 향후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서구문명에 적대적인 중국과 이슬람세력의 결합을 주목했다. 헌팅톤은 서구문명의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도 아래 대서양동맹의 결속을 제고시키는 한편, 그네문명 국가들을 서구문명 동맹으로 밀착시키고 비민주적 문화 전통인 중국과 이슬람의 결합, 즉 무기·석유·테러리즘 결합을 저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³²

미국 예외주의는 서구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 자유주의 등으로 무장되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해야 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³²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이와 유사하게 후쿠야마의 역사종말론 역시 서구문명을 위협하는 문명권으로 중화문명과 이슬람 문명을 들고 있다. 후쿠야마는 세계문명권을 민주주의 문명권과 비민주주의 문명권으로 이분화하고, 서구, 일본, 라틴아메리카 등은 민주주의 문화를 지닌 반면, 중국, 이슬람권은 비민주적 문명권으로 분류하고 이 두 문명권은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에도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토대에 기반하여 부시 행정부는 봉쇄정책을 넘어서 힘의 사용을 통해 중국 및 불량국가들의 정권까지도 교체해야 한다는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예외주의와 유사하게 중국의 중화주의도 자기중심적 가치체계로 구성되어 현재의 중국 국가전략 추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화주의는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 발생국이었던 중국의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하면서 자국과 자민족의 문화를 최고의 지위와 절대적 위상으로 올려놓은 문명관인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국제질서관으로 볼 수 있다. 중화주의는 중국 한족의 문화를 보편적 문화로서 인식하고 비한족 문화를 야만(夷)으로 간주하는 화이사상(華夷思想)으로도 불린다. 중화주의에 깃든 핵심명제는 중국이 지리문화적으로 세계의 중심으로서 가장 우월한 문명을 지닌 국가라는 점과 더불어, 하왕조의 문물로서 중화주의는 인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표준으로서 추후에도 구현되어야 하며, 다른 민족 역시 중화주의를 수용할 경우 발전된 중화문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개의 이적세계(夷狄世界)도 고도로 발전된 중화주의를 수용해야만 야만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³ 따라서 중화(中華)는 발달된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도덕과 예교문화를 숭상하면서 지리적으로 중원 및 중원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중화주의는 세계에서 유일한 중심국인 중국을 상정하고 이를 정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위계적·불평등적인 국제질서관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중화적 국제질서에서는 각 국가들이 대내적으

³³ 강정인 · 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 중화주의의 비교연구,” p. 105.

로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자주라는 주권개념이 결여되어 있다.³⁴ 따라서 중화적 국제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 지배관계를 기본축으로 하고 있었다. 한족 이외의 이민족이 중원을 지배하여 정복왕조를 형성하더라도 모두 중화주의를 표방하여 중화주의적 국제질서는 존치되었다. 이 경우 화이관계(華夷關係)가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 왕조가 화(華)로 승격되어 그 지배의 정당성을 보장받았다. 이것은 중국의 종족적 의미의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문화적 정체성은 유지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중화주의는 주변민족에 대한 한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족이외의 이민족이 중원을 통치한 기간이 장기간 존속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처럼 극심한 인종주의로까지는 발전되지 못하였다.

세계의 중심으로 가장 우월한 문명을 지닌 것으로 자부하는 중국의 중화주의는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에 깊은 상처를 받았으나,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중화주의는 반 서구주의에 기반한 중국적 근대화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중국의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자기중심적 중화주의는 과거 열강에 의한 침탈의 역사를 치욕으로 생각하고 경제발전을 토대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민족주의적 요인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들의 동아시아 지역패권은 당연지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요인에 상승작용을 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문화와 현실적인 정치관을 들 수 있다.³⁵

³⁴ 위의 글, p. 119.

³⁵ 모택동, 등소평 등의 중국 정치지도자들이 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 등을 즐

중국의 중화주의는 일면으로는 중국의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반작용임과 동시에, 국내적 정치· 사회· 문화통합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19세기 말 동체서용(東體西用)을 앞세워 서양의 과학기술문명과 제도를 동양적 정신에 맞추어 개조하여 서양 제국주의세력에 맞서고자 하였으나, 근대화에 실패하고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되었다. 그 후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면서 동체서용(東體西用)의 전통에 따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앞세우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중국이 성공적인 산업화로 인하여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견제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 위협론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서는 중화주의 내지 중화민족주의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중화민족주의적 성향은 1999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의해 폭발하였고, 그 후 동북공정 등의 역사문제, 선저우 5호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등의 일련의 사건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중화주의의 대두는 국내정치적 환경에도 그 원인이 존재한다. 스탈린주의 유산인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세계체제 편입적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중국에서 사회적 불평등, 인민주권 의식의 성장, 소수민족 독립문제 등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는 개인적 자유의 확대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협소화를 가져와 천안문사태와 같은 반체제적 요인을 함축

겨 읽는다는 사실은 투쟁, 세력균형 등의 전략적 사고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적 인식이 뿌리 박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하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체제 편입적 산업화로 인하여 그 동안 유지해왔던 국가이념으로서의 마오주의는 쇠퇴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의 부작용과 가치체제의 상실을 중화주의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통제적 중앙권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개혁·개방에 의한 국가권력 약화는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중화민족주의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중화민족주의는 체제 안정을 위하여 국가중심적 성격이 강한 이념적 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발전, 정치안정, 국민통합 등의 담론적 요인이 배태되어 있다.³⁶ 따라서 중화주의 또는 중화민족주의 담론은 체제안정을 위한 정치이념적 성격과 더불어 중국의 대국화 성향을 견제하는 중국위협론에 대항하면서 국력 증대를 통해 세계중심국으로 등장하려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국체제의 권위주의적 요인, 사회주의 성향, 집단주의적 요인 등이 있다.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가치를 내걸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지고지선의 자기중심적 가치체제는 국민국가 중심적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제국주

³⁶ 중화민족주의에는 전통문화에 천착하는 신유교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반서구 기치 아래 중국적 근대화를 모색하는 신좌파적 경향도 존재한다. 중국의 신좌파들은 중국의 근대화가 서구적 의미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 등 심화, 중앙권력 형애화에 따른 체제위기가 일어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가통합을 위하여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정의를 존중하는 산업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영, “중화민족주의와 중국의 대외정책,” 동아시아연구, 제4호 (2002).

의 성향까지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체계는 서로 충돌하여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국의 ‘소명’외교는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을 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봉쇄, 더 나아가 예방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공세적 대중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 대중정책에 대해 중국은 다극화전략으로 응수하면서도 주변국가들을 포괄하는 중화주의적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패권경쟁을 수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나. 미국의 대중 안보정책과 중국의 대미 안보정책

(1) 미국의 대중정책

미국의 대중정책은 개입(engagement), 균형(balancing), 봉쇄(containment) 등의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지니면서 추진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냉전 이후 시대에 따라 중국에 대해 여러 종류의 외교·안보전략을 채택해 왔다. 전면적 봉쇄전략(1945~1972), 동맹전략(1972~1989), 부분적 제재전략(1989~1993), 전면적 개입전략(1993~2000), 개입·봉쇄전략(2000년 이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클린턴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안보이익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접근금지 및 핵억지의 보장,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핵·화학·생물학무기와 탄도미사일체계의 확산금지 등으로 규정하였다.³⁷ 1995/1998년

³⁷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동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전략은 동아시아에 10만 명 미군배치, 전역미사일 체계의 공동연구 등의 미·일간 안보협력 증대 등 미국의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아·태지역에서 일본보다는 중국을 중시하였으며, 중국을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로서 아·태지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세계적 세력’(global power)으로 인식함으로써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을 미·일관계보다는 미·중 관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유연한 성격의 군사적 봉쇄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민주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화평연변(和平嬗變) 정책, 즉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봉쇄정책’ 또는 개입과 봉쇄를 절충하는 성격(con-gagement)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 보호와 달성에 있어서 힘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전임 민주당 행정부와는 달리 중국을 범세계적인 세력으로 보기 보다는 아·태지역에서 하나의 중요한 세력(regional power)으로 간주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군사·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여 미국의 국가 이익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소위 ‘중국위협론’에 기초하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보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출범하였다.³⁸ 미국의 중국견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 C.: U.S.G.P.O.), p. 13.
³⁸ 대부분 친공화당계 학자와 인사들은 중국위협론을 지지한다. 부시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현재 중국의 국력 신장세로 보아서 중국은 현상유지 국가(status quo power)가 아니라 아시아 역내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power)로 파악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권력과 안보적 야심을 억제해야 하며, 경제교류를 통해 중국

하겠다는 전략을 함축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패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수정주의적 전략을 통한 지역 세력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변화시켜서 중국을 포위·압박해 나가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중국견제론은 미래 세계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하고, 향후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없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2000년 대선과정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발표된 QDR에서도 중국을 “가공할만한 자원을 가진 경쟁자”로 묘사하였고, 지역안보 체제 구축방안을 언급한 대목에서 “미국의 이해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능력을 지닌 지역 강대국이 출현할 수 있다”며, “벵골만에서 일본해까지 아시아연안”이 특별히 도전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후 2002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중국 등 잠재적 적대국들이 미국의 힘에 견주거나 능가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추구 정책은 새로운 (지역)패권국가의 등장을 견제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 경우 빠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패권 유지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이다. 1997년 미국의 “4개년 방위검토”는 “중국은 아시아의 군사대국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고,³⁹ 2001년 “4개년 방위검토”에서는 아시아에서 “가공할 자원기반을

국내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은 진행해야 하지만, 양국의 이익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의 대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pp. 45~62.

³⁹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1997), p. 5.

가진 군사적 경쟁자”가 출현할 가능성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국을 잠재적 도전자로 규정했다.⁴⁰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시각은 2001년 1월 미 의회에 제출된 “핵태세보고서”가 잠재적 핵사용 대상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한 것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핵태세보고서와 관련,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상호 핵무기로 상대방을 겨냥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고 강한 불만감을 토로하였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국가안보개관보고서』(2003. 4. 22)에서 “부시 독트린은 급진적인 이슬람을 제거하는 것과 중국이 초강대국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포용하는 것이다. 테러국가들과 테러단체들이 이슬람 세계 및 중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⁴¹ 이러한 주장은 헌팅톤의 문명의 충돌에서 제기한 유교와 이슬람의 커넥션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미국이 이라크는 물론, 카스피해 연안과 중앙아시아를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전략을 분석해보면 그 목표가 중국인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였던 인도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미·일동맹 등의 동맹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중국봉쇄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계전략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미래의 중국 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지정학적 전략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고, 아시아의 모든 미군배치 및 군사동맹은 중국을 봉쇄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⁴⁰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2)*, p. 4.

⁴¹ 이장훈, 네오콘 팩스 아메리카의 전사들, p. 245.

2000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동맹중시정책으로 인하여 대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 지위의 정상화, 즉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보다 부정적·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일본이 현재의 동맹관계 아래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우월성에 도전하지 않는 한, 일본의 본격적인 군사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⁴² 특히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화헌법 개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를 해제하여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처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⁴³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잘 훈련된 군사력과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란 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수행을 위한 주춧돌이 되는 국가이며, 미·일동맹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본다. 미·일동맹은 아시아에서의 영·미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기술의 제공, MD 협력, 정보협조 체제 구축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구상에서 미국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집단자위권의 행사 금지를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대일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2004년 미국의 군사변환과 더불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⁴² 미국의 신보수자들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전하더라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로 보고, 일본의 핵무장을 추진하여 중국견제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Japan Card,” *The Washington Post*, January 3, 2003.

⁴³ Richard Armitage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2000).

Posture Review)에 따라 주일미군의 기능과 구조도 변화되고 있다. 미국이 육군 제1군단 사령부의 일본 이전 등 육·해·공·해병대 사령부를 일본에 집중시키려는 것은⁴⁴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다.⁴⁵

대만문제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하고 폭발적인 성격을 갖는 핵심문제로 작용해 오고 있다. 과거 미·중 관계가 미국의 세계전략상 우선 순위를 점했던 클린턴 정부는 대만의 존재는 하나의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반면, 중국을 미래의 미국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부시 행정부는 대만을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위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만의 위상과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부시 행정부 집권 시기에 대만문제는 미국의 대중국전제정책의 대표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⁴⁴ 구체적으로는 주일미군사령부가 육군 제1군단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를 모항으로 하는 제7함대, 도쿄(東京) 요코다(横田)기지의 제5공군, 오키나와(沖繩)주둔 제3해병원정군 사령부 등으로부터 사태에 따라 편성되는 소규모 통합부대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워싱턴 소재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옮기고, 이와 함께 육·해·공·해병대 4개 군의 편성도 기동력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소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22일.

⁴⁵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내 기지를 활용한 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내에서는 조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주일미군 재배치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안보조약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부대 지휘 기능을 주일미군사령부에 부여하는 것은 일본방위와 극동의 안전 및 평화를 위해 일본의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미·일 안보조약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안보조약을 개정하든가 해석을 변경해야 하는데 국내 정치를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이런 소극적 자세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지난달 하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최고 지도자의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22일.

대만은 미국 서부해안과 동아시아, 일본열도, 중동을 잇는 해상 교통로의 요충지이다. 대만이 확보되면, 대만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 호르무즈해협까지 연결되는 ‘해상실크로드’를 일정부분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석유수송로인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통일한다면 중국이 아시아 제해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반면, 대만이 미국의 비호 아래 건재하다면, 미국은 중국군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경우 중동 석유수송로를 장악하여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은 물론, 중국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만문제 관련, 부시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만의 미래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평화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대만인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부시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 취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 보다 선명한 정책으로 선회해 가고 있다. 즉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이 대만 측의 도발에 기인하는 경우 미국의 불개입 정책을 분명히 하는 반면, 중국의 무력사용 시 대만자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유보해 왔던 첨단무기의 對 대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4월 24일 대만이 요구한 이지스급 구축함과 패트리엇 PAC-3 판매는 연기하였으나, 디젤 잠수함 8척, Kidd급 구축함 4척, P-3 ASW 초계기 12대 등 50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 방침을 결정하였다.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결정한 직후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등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훼손할 경우, 대

만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⁶

9·11 사태 이후 반테러 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지역 패권세력에 대한 견제와 같은 장기적 전략보다는 북한의 핵개발 억제, 대만해협의 군사적 위기 방지 등 보다 당면한 현실적 위협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은 반테러전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정책 구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반테러전 수행의 부수효과로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효과적인 중국포위전략 수행, 인도와의 협력 증대,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등에서의 미군 주둔, 석유수송로 확보 등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인 중국포위전략은 미국이 중국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이다. 반테러전쟁을 통하여 중국과 결탁할 수 있는 이슬람세력을 미리 통제하고, 더 나아가 유럽국가들의 미국과의 결속력을 유지시키는 한편, 일본, 러시아 등의 그네문명들이 중국·이슬람세력에 밀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중동지역 및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면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포위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북한을 친미지역으로 전환시키면 중국을 동아시아지역에서 포위하고 일본 방어전선을 확대시키는 지정학적 효과가 있다.

2001년 QDR은 유럽과 동아시아에 집중해 온 냉전기의 미군 전

⁴⁶ Kerry B. Dumbaugh, *Taiw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Policy Choic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Updated September 28, 2001), pp. 4~5.

진배치 양상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미군을 남아시아와 인도양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 보고서도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일본 최남단 및 괌(Guam) 등으로 재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⁴⁷ 또한 필리핀과의 안보협력도 재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베트남에 미군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의 제해권 장악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가운데 난사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이들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곳으로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임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⁴⁸ 난사군도를 둘러싼 갈등구조에서 해상실크로드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2002년 필리핀 반군 소탕 명분으로 미군 파병과 군사원조를 단행하고 특정 필리핀 상품 무관세, 경제원조 제공 등 경제적 혜택도 부여하는 한편, 필리핀을 비(非)나토 동맹국으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 의 일련의 조치들은 필리핀 내에 클라크 공군기지 및 수비크 해군기지 등을 활

⁴⁷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Force Posture*, 2001, pp. 63~78.

⁴⁸ 중국은 2002년 아세안 회원국 중 4개국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고조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아세안과의 우호협력조약(TAC)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은 아세안 역내국가간 신뢰구축문제 등을 관장하는 행동규약으로서 무력사용 위협 포기, 주권 및 영토보존 존중, 상호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타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용할 수 있는 군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우호적인 필리핀정책을 통해 필리핀을 동남아 전진기지로 삼아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군사협력을 이끌어내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이외에도 미국은 베트남과도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태국과 싱가포르와 함께 미국이 동남아에서 벌이는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인 ‘골든 코브라’ 훈련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등 미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협력 이외에 미국은 베트남과 상호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직항 재개에 합의하는 등 경제적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베트남을 군사적 협력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캄란만 기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이자 반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와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태국에 비나토 동맹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싱가포르로부터 장이 해군기지를 제공받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⁴⁹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시 정부는 핵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아시아의 또 다른 우방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회교세력에 대한 견제적 균형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단극화 질서 구축에 대한 대응메커니즘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러·인 삼각협력의 가시화를 어렵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부정적

⁴⁹ 이장훈, *홍군 vs 청군* (서울: 삼인, 2003), p. 71.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우방국가로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서남아시아에서는 인도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인도가 중국의 영향력이 인도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원한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양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2) 중국의 대미 안보정책

중국은 현재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해 기존의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가 지니고 있는 생산력 이전효과를 십분 이용하여 경제력 향상에 적극 이용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력 향상에 기반을 둔 국방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견제에 균형화전략(balancing)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해서는 다극화전략에 기반한 동반자 외교를 통해 세력균형(balancing)을 도모하고 있다. 즉,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한 것처럼, 내재적으로는 근대화 및 군비확장을 추구하되, 외재적으로는 보장외교(reassurance diplomacy)를 통하여 주변국가들을 안심시킨 것과 유사하게, 중국도 산업화 및 군비확장 등의 내재적 균형화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변국들을 다자주의 및 동반자외교를 통해 주변국들을 안심시켜 반중국 연합전선 구축을 방지하는 신비스마르크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⁵⁰

⁵⁰ Avery Goldstein, "An Emerging China's Emerging Grand Strategy, A Neo-Bismarckian Tur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eds., *Mastanduno*,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외정책은 기본방향을 종합적 국력⁵¹의 확대신장에 두고 있다. 등소평은 “모든 공작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지, 인민의 부유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국가의 융성과 발전에 유리한지 여부가 그 일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⁵²고 설파하였다. 즉 중국의 현대화가 중국의 국가 최고목표이며,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현대화 건설 대신에 반미, 반패권주의 투쟁을 외교정책의 수위에 놓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⁵³고 등소평은 주장하였다. 반미 대신 현대화를 중국의 최고 국가목표로 추진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은 장쩌민, 후진타오 등의 정치지도자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가 최고목표를 경제성장에⁵⁴ 두고,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⁵¹ 중국은 중국의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을 (1) 물질 혹은 경성능력(자연자원, 경제력, 과학기술, 국방), (2) 정신적 혹은 연성국력(정치, 외교, 문화, 교육), (3) 조정력(조직화된 지도력, 통제, 관리, 국가발전의 조정), (4) 환경적(국제적, 자연적, 국내적) 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Michael Pillsbury, *China: Debates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0), Chapter 5.

⁵²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23.

⁵³ 위의 책, p. 363.

⁵⁴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천명하였다(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차 전국대표회의). 중국은 경제성장 단계를 온포(溫飽)/ 소강(小康)/ 대동(大同)으로 구분, 온포는 이미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20년간 매년 7%대의 경제 성장을 통해 GDP를 4배로 늘려 1인당 GDP 3,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경제발전 지상주의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견지하면서 내수 시장의 지속적 개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화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불안정한 국유 및 집체기업의 소유권 개혁문제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제도를 구축 중에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체제전환적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한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외자도입과 수출중시 등 대외 개방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해외투자나 FTA 참가 등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국제화 노력을 추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은 국내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정치환경 조성
에 두었고, 대외정책적으로는 평화적인 국제환경의 확보에 우선
적 가치를 두었다. 따라서 경제력 증진을 종합적인 국가능력 향
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반면, 군사력은 경제성장을 위
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중국지도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 미국과의 안정적 협력관계의 유지·발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기초는 사실 개혁·개
방을 국가 목표로 삼았던 1980년대 이래 “빛을 감추고 밖으로 드
러내지 않고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전략적 기초
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의 ‘도광양회’는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을 피하
고 국력 소모를 억제한다는 실리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냉전 종식 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정세 하에서 1990년대 후반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의 유기적 통일을 지향하는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안보전략”⁵⁵이 출현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중국
지도부는 국가전략에서 종합적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한 반면, 군사력은 경제
발전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군사력 현대화
등 국방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지도부의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하게 된다. 겉프전

진하고 있다.

⁵⁵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 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1期), pp. 5~10.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급부상하고, 1995·96년 중국의 대만 위협용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항모를 대만해협으로 파견함으로써 대만을 지원하고, 미국이 1998년 이래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하는 전역미사일 방위체계(TMD)를 구축하고, 1999년 5월 코소보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군이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사건을 계기로⁵⁶ 국제정세에 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마련되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제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⁷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실감하면서 국가전략에서 군사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련의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현대화와 국방 현대화 과제를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추진키로 하는 “경제와 국방의 균형발전론”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⁵⁸ 냉전 종식 이후 미국주도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을 새롭게 출현시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와 안보의 균형발전론은 9·11 테러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에 의하여 탄력을 받고 있다. 9·11 테러

⁵⁶ 유고 중국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폭격 사건 이후 군부 및 중국공산당 전인대에서 대미정책을 양국간 군사교류 중지, 주미대사 철수 및 외교관계 축소 등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가하였다.

⁵⁷ 이태환, “중·미관계의 변화” <<http://www.eastasianstudies.org>>.

⁵⁸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미·중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p. 11. 중국의 국가전략상의 변화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력균형 기제가 보다 강화된 결과이다.

이후 미국은 아프카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최첨단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 및 호주와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 파키스탄 및 필리핀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동반자관계를 맺는 등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포위하는 일련의 시도는 중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현저한 수준차를 보이는 국방력을 현대화시켜서 미국의 암묵적인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002년 후지타오 체제가 확립된 후 등장한 부국강병론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의 유기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국화 신안보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04년 7월 24일 실시된 당 정치국 제15차 집단학습에서 “평화 및 발전 추구하고 자주적인 외교정책 유지에 있어 국가주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과 경제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부국강병론은 지난 100년간 지속된 중국의 간절한 소망으로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의 협조· 발전을 견지하는 방침아래 경제발전의 기초 위에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⁵⁹

경제발전과 국방현대화를 통해 종합국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안보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 날로 증가하는 국방비 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대두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은 종합국력 발전의 국가목표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을 강

⁵⁹ 연합뉴스, 2004년 8월 10일.

조하면서 ‘인력자원 확보, 조화로운 사회환경, 국방건설’ 등의 ‘평화굴기’(平和崛起)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⁶⁰ 막강한 국방력은 평화굴기 외교와 조국 통일의 필수전제라는 입장이다. 중국의 평화로운 등장을 강조하는 ‘평화굴기’(平和崛起)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이 세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지, 세계 정복을 목표로 했던 바이마르공화국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 및 냉전시기의 소련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데 숨은 의도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도광양회’와 ‘화평굴기’의 원칙아래 해묵은 국경 분쟁을 해소하는 등 평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왔다.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베트남 등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일부 분쟁 문제 해결 때는 과거에 비해 훨씬 완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⁶¹ 이러한 ‘도광양회’, ‘화평굴기’, ‘유소작위’ 등의 중국의 대외전략은 상대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균형을 초래한다는 위협균형론을 연상하게 만든다.⁶²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⁶⁰ ‘평화굴기’는 중앙당교 부교장 출신으로 평화굴기 과제 연구개혁방안단 이사장인 정비젠(鄭必堅)이 2003년 10월 하이난(海南)성 보아오 포럼에서 처음 거론하였다. 그 후, 원자바오 총리가 하버드대학 연설에서 거론(동년 12월)하면서 공식화되었다.

⁶¹ 중국은 마찰을 빚었던 국경 지역의 50% 또는 그보다 작은 면적의 지역만 중국에 편입되는 안을 수용했다. 예를 들어 타지키스탄과 마찰을 빚었던 파미르고원 지역의 경우 중국은 총 2만8,000km²에 달하는 분쟁 지역 중 고작 1,000km²만 가져갔다. 전쟁까지 벌였던 인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호 신뢰 구축과 병력 감축 협정 체결로, 과거보다 국경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난사군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은 2002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게 상당 부분을 양보하는 행동 강령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⁶²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위협균형론에 의하면 국가는 세력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동맹

자신의 능력(capability)은 키우되, 이러한 능력은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담지목적으로 배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促進平和發展)한다는 입장의 ‘평화굴기’(平和崛起)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시된 논리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다극화전략은 반패권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다극화전략은 반미를 내걸고 미국을 한편으로 몰아세우는 외교전략이 아니라 미국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세계질서를 다극화로 조성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은 다극화전략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대중정책이 강경일변도로 나아갈 경우 군사적 대응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⁶³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버리고, 봉쇄(containment)와 포용(engagement)을 동시에 병행 교차시키는 복합적 정책(a policy of congagement)을 취한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정책을 다자주의 및 동반자 유대외교를 혼합한 다극화전략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국제적 공공재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관계 및 균형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threat)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동맹 및 균형 행위를 한다.

⁶³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전력상 미군에 대해 열세에 있을지라도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기선제압식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s)을 통해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대량의 미군 사상자를 내어서 미국내 반전여론을 확산시키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만한 진술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전력의 열세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 대한 저항이나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미·중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p. 27.

도모하여 종합국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미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중 압박을 동반자외교 및 다자주의정책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한다.

중국은 대외정책 노선으로 다자주의 전략을 대국화를 위한 대전략(China's grand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의 다자주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미·중 관계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외교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다.⁶⁴ 그러나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는 중국 외교에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압력을 피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는 중화주의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이고 헤게모니 원칙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을 회피하면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국력을 비축하여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외교전략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경제적 다자주의를 한층 더 제도화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세계시장 편입이익을 향유할 것이지만, 안보적 차원의 다자주의는 여전히 도구적 성격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⁶⁵ 즉 중국은 다자주의를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반자 유대관계(partnership

⁶⁴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No. 168 (December 2001).

⁶⁵ Hongying Wa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 40, No. 3 (May/June 2000), p. 485.

& linkage) 외교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일본, 호주,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위협론을 유포시키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정책을 구사하면,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 partnership 유대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partnership 외교는 탈냉전 후 구축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패권구도를 약화시키고 다극적 국제체제(multipolarity) 건설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⁶⁶

중국 외교정책의 최대의 관심사항은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의 설정에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는 미국중심의 국제체제이다. 미국은 국제정치·안보·경제상의 제반 레짐 및 규범을 유지·관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제제를 가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도전국가 등장을 방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국력 배양을 통해 강대국 위상을 확립하려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미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국의 국가전략 추진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게는 중·미관계의 안정이야말로 세계질서 및 동아시아 안보질서 수립에 있어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위협의 강도를 축소하고 미국중심의 국제경제체제에서 종합국력 향상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세력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중국 대미전략의 근본목표는 중·미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종합국력을 배양하

⁶⁶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p. 846.

지 않으면 미국과의 전략적 패권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더욱이 미국은 향후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을 꼽고 군사적으로 봉쇄정책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는 개입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에 필수적 정책적 목표인 것이다.

현 단계 중·미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의 갈등적인 측면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군사적·정치적으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을 해소하고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교역상대, 투자대상지로서 중국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동시에,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종극적으로는 중국의 민주화를 촉발시켜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의 WTO 가입, 북경 올림픽, 상해 국제박람회 개최 등을 용인하였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제품의 수출시장과 대중 투자국으로서 중요하며, 지속적 개혁·개방 추진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동아시아의 구조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국은 갈등과 협력요소를 공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안으로 대만문제, 인권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남겨놓고 있

는 상황이며, 미국의 대중정책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보다 강경하게 변할 경우 중국의 협력적 대미정책도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미관계는 중·일관계에서도 유사하게 갈등과 협력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중·일관계는 경제적으로는 협력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보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갈등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려는 미·일동맹에 대해 중국은 일본과 갈등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 「미·일간의 신안보공동선언」, 1997년 ‘미·일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2004년 유사법제 등 일련의 미·일동맹의 성격변화로 인하여 중국은 미·일동맹의 기능이 과거 일본 방위에서 한반도, 바쉬(Bashi)해협(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군비증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일본의 ‘戰域미사일방위체제’(TMD)가 일본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일본의 TMD 운영계획은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의 군사력 및 공격력을 증대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상과 공중 자위대의 강화는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변화를 가져와 이 지역에서 새로운 불안정을 산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이 강대국 외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도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MD 공동 저지 등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데 그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다수의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2001년 체결

된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상하이 협력기구」(SCO),⁶⁷ 무기 수출 등을 통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7월과 2002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 2001년 7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러, 2003년 5월 후진타오 신임 국가주석의 방러 등을 통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있다. 양국은 세계질서 다극화를 위한 협력의 지속, 유엔안보리의 권위 유지와 국제법 원칙 준수를 위한 노력, 아무르강 유역 영토문제의 조속한 해결,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체첸의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응, SCO 역할과 기능의 확대·발전,⁶⁸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국제전쟁에 대한 동참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장쩌민 국가주석은 방러시 1950년 2월 체결된 「중·소 우호동맹 및 원조조약」이 양국간 분쟁으로 1980년 자동폐기된 이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이 없던 상태에서 ‘동등하고 신뢰있는 동반자관계 및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향후 20년간 포괄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⁶⁹을 체결하였다. 2005년 중

⁶⁷ 1996년 4월 17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중·러 및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이를 견제하고 공동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6일 ‘상하이 5개국회의’를 발족시켰다. 2001년 6월 상하이 제6차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상하이 5개국회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로 개편되었다.

⁶⁸ 2001년 중앙아시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만든 SCO는 빠르게 힘을 키워 현재 역내 안보 블록으로 진화하고 있다. 옛소련 국가들의 불안정한 안보상황과 이곳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중·러의 욕구가 맞물린 것이 급성장의 배경이다. 2005년 10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는 6개 회원국뿐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으며 합동군사훈련 계획 등 안보 협력이 주된 의제다. 옵저버 3개국이 곧 새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면 SCO의 영향력은 남아시아와 중동으로까지 확대된다.

⁶⁹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pp. 1~5. 이와 같은 정상회담 이외에 중국은 양국 총리와 부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의 상호 초청·방문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4국과 함께 6국이

국은 러시아, 인도와 함께 미·일 동맹강화,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등 미국의 아시아 포위전략에 맞서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에 대한 균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⁷⁰

3. 향후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망

가. 미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

미국의 잠재적 도전세력으로서 중국이 부상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미국의 최선의 전략적 선택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발전을 억제하여 미·중 간 세력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 최선의 방법이고, 중국의 국력 증대를 용인하되, 중국의 민주화를 진전시켜 이념적 차이를 축소시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의 방안이다.

우선 먼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중간 세력전이를 방지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은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이다.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인권 개선, 소수민족 독립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체제변화를 도모하거나 중국의 분열을 획책, 미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하는 대외정책이다. 이 경우에도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관계악화에 따른 우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군사봉

매년 개최하는 SCO를 통해서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⁷⁰ <<http://news.media.daum.net/foreign/asia/200506/07/chosun/v9267844.html>>
(검색일: 2005. 6. 7).

쇄정책과 더불어 시행되지만, 정책적 우위는 봉쇄정책(containment)보다는 개입정책(engagement)에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 취했던 개입정책(engagement)은 민주화가 수반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에 의해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미국중심의 국제체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중국의 민주화 유도 시도에는 단순히 중국의 민주화를 통한 이념적 토대의 동일화를 도모하여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을 꾀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더 나아가 민주화에 따른 자유화를 통해 소수민족 독립, 빈부·도농·지역갈등 폭발 등을 야기하여 과거 소련 붕괴 후 러시아처럼 경제적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음모론적 시각도 한편 존재하고 있다. 즉, 중국이 체제붕괴 없이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등장할 경우 미·중 간 세력전이가 급격하게 발생할 경우 민주화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⁷¹ 따라서 이 경우 미국의 패권적 위상은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러시아처럼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따라서 경제적으로 발전능력이 약화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최선의 첩경이다. 중국이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준까지 발전할 경우 중국은 최소한 국제체제에서의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⁷¹ 민주화된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게 최소한 동아시아의 패권적 지위를 권위주의적 경제대국 중국의 경우보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빨리 내어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중국견제가 중국의 권위주의 모델 비판에 정당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민주화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대중국 반동맹에 동참할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된 국가간 전쟁은 최소화된다는 민주평화론 논리를 따라⁷²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수용할 경우, 미국경제는 달러 평가절하로 인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고 2류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외국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본수지 흑자로 버티고 있으므로, 미국이 중국에게 패권적 지위를 넘기는 순간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위안화에게 기축통화 위상을 빼앗기고 평가절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중국의 분열을 도모하여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 화평연변식 정책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중국경제가 높은 성장궤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국력은 미·일 동맹의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패권안정 상황이 현실적인 시나리오이다. 안정적인 현상유지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예측하는 패권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은 현존 지역질서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균형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사이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현재와 유사하게 대립되는 일초다강체제로 될 것이다.

중국이 민주화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지만 미국과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역시 미국의 동

⁷² Michael W. Doyle, "On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아시아 지역 주도권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패권적 의미의 안보 공공재로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의 조정이 수반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일초다강체제로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일초다강체제는 체제 이념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대립적 요인이 사라지고, 국력 상 미국의 우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패권안정 구도 가운데 가장 안정성이 부여된 시나리오이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패권안정 상황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등장할 수 있다. 중국이 민주화되고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로 변신하여 제반 역내질서 문제를 미국과 함께 민주적으로 해결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 고립주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중간의 세력전이 전쟁 가능성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⁷³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지역내부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공동체를 창설·운영하면서 경제공동체를 지향해나가는 형태로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이 민주화되고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나 경제발전이 미진하여 미·중 간 세력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화평연변식 개입주의 정책으로 인한 중국분열 시나리오보다 현실성이 낮은 시나리오이다. 또한 중국체제 위기를 야기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화평연변식 개입주의적 미국의 시도는 목적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첫째로, 중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랬던

⁷³ 김우상, “미·중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 p. 19.

것처럼 국민소득 수준이 상당정도 이를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둘째로, 후발산업화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한 과거 아시아 신흥공업국 한국, 대만 등의 사례가 입증한다고 하겠다. 즉, 체제붕괴 없이 약 7,000달러 전후에 정치위기를 겪으면서 민주화를 달성하고 근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세계경제통합적 산업화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중국도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설사 중국이 민주화 과정에 봉착하여 정치적 위기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치위기는 체제위기가 아니라 체제내부의 발전위기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산업화와 개방으로 야기된 빈부갈등, 도농갈등, 지역갈등, 소수민족 독립문제 등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⁷⁴ 동북공정, 서북공정 등 소수민족 문화를 중화문화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소수민족 동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후진타오체제의 민생경제 강조 등 균형발전을 통하

⁷⁴ 중국은 1990년대 후반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추진은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중앙권력 약화와 사회 불안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추진은 단·중기적으로 중국의 체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병곤,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구상과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2004).

여 사회경제적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화평연변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및 중국의 체제 붕괴를 도모할지라도 중국은 사분오열되는 상태에 이르기 보다는 오히려 체제의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함으로써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위협당하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미국의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켜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역관계로 인하여 한국, 아세안국가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까지도 중국의 경제파트너로서 영향력 효과(influence effect)⁷⁵에 노출됨으로써 중국 편향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⁷⁶ 더욱이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민주화 진척보다는 권위주의 중국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단·중기적으로 중국 권위주의체제가 강화되는 역설적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더욱이 화평연변식 개입정책과 더불어 대중국 군사적 봉쇄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모든 국가 역량을 경제발전에 진력하여 미국과의 국력격차를 보다 빨리 축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 나토, 미·호주동맹 등의 이완을 가져와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은 물론 세계패권까지도 급속하게 잠식당해 중국의 패권체제 구축을 촉진시킬

⁷⁵ 영향력 효과는 허쉬만의 의해 처음 거론된 것으로서 국가간 경제관계가 국가간 권력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국가 간의 무역, 기술이전, 대외투자, 지식이전 등의 경제관계가 일정한 이익을 특정 국가에게 가져다주고, 이를 쉽게 대체할 수 없을 경우 국가 간 권력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Albert O. Hirschman,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5/1980).

⁷⁶ 2005년 5월 미 라이스 국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여 미국과 인도와의 결속을 다졌으나, 그 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여 미국의 대중포위압박을 완화시킨 바 있다.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에 대한 균형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미국중심의 국제체제에 편승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우선 국력을 증진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힘의 우위를 지니고 있는 미국에 대한 균형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수반하므로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편승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힘을 축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봉쇄 없는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은 중국의 패권도전 저지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중국에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줌으로써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미·중 간 세력전이가 중국에 유리하게 발생되기 전에 미국이 대중국 유화정책을 취하여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재편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미국이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을 실시할 경우 대중 군사적 봉쇄가 수반되지 않으면, 다극체제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과정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을 행하지 않고, 중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세력분포에 따라 중국중심의 일초다강체제,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 또는 미·일·중·러에 의한 다극체제로 변모하고 동아시아 안보질서도 다자안보나 집단안보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대중국 군사봉쇄를 강화한

다면 동아시아는 상당 정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미·중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여 양국의 군사적 대치가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을 계기로 갈등국면으로 치닫는다면 동아시아 질서는 패권갈등 국면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나. 미·중 패권갈등 구도

(1) 군사적 봉쇄정책 (Military Containment)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어하고 미국중심의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은 과연 무엇인가?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이 중국의 패권도전 저지에 유효하지 못하다면, 미국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우선 대중 봉쇄정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부시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대소련 전면적 봉쇄정책과는 달리 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적 측면에서 대중국 포위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⁷⁷ 이러한 측면에서 현 미국의 대중정책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패권국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패권쇠퇴기 현상으로 보는 패권이론적 관점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패권쇠퇴기의 정책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⁷⁸ 그러나 현재 미국의 국력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기

⁷⁷ 나이(Nye)는 부시 행정부는 제어하기 어려운 경제부분은 제외하고 경제·정치적 권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군사력 중심으로 세계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Larry Everest, *Oil, Power, and Empire* (Canada: Common Courage Press, 2004), p. 250.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보다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서처럼 패권국가는 미래의 세력판도의 향방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확고한 패권안정을 위하여 공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⁷⁹ 따라서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근저에는 탈냉전 후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국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불안한 힘의 우위를 도전이 불가능한 패권체제로 전환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⁸⁰ 과거의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은 미국 국익의 일방적 추구를 자제하고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미국중심의 일초다극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 역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역외균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초다극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미국중심의 단극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 상황을 저지하기 위하여 현상타파식 수정주의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을 미래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잠재적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인식하고 있다.⁸¹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대외

⁷⁸ Jeffrey Taliaferro,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2000/2001).

⁷⁹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 비극; 장노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론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2호 (2003).

⁸⁰ 이에 대해서는 장달중·임수호, "부시 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 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2004).

정책의 중심이 아니라 일본과의 동맹 강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미사일방어 계획 추진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부시 행정부 는 기술적 문제, 고 비용, 유럽국가 및 러시아 및 중국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동 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 추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의 중국봉쇄정책은 안보부 보좌관이었던 아론 프리드버거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국가는 중국 밖에 없으므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초점은 아시아로 옮겨야 하고, 아시아 군사동맹은 중국봉쇄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5개 지역으로의 중국봉쇄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⁸²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봉쇄전략은 경제적 봉쇄가 수반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국화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지 못한

⁸¹ 미국 공화당은 2004년 중국관련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대중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번영을 증진하는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국의 민주발전이 미래 미·중관계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8월 31일 참조.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관계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입장에서 그대도 나타난다. 파웰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지만,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 편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⁸² Aron Friedberg, "Asian Allies: True Strategic Partners,"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pp. 197~219.

다. 미국은 과거 동서냉전 시대에 소련 및 사회주의 세력 봉쇄를 위하여 군사적 봉쇄는 물론 경제적 봉쇄도 이행하였다. 서유럽에서 나토 결성, 한미·미일동맹 결성 등을 통하여 군사적 봉쇄를 하는 한편, 군비경쟁을 통하여 소련의 체제경쟁에 부담을 주었다. 특히 소련·동유럽 및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에 가한 전략물자의 수출금지조치(COCOM) 등 미국의 경제봉쇄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무역 및 자본거래의 금지·제한 조치를 하여 이들 국가들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미국의 대공산권 경제봉쇄가 가능했던 것은 공산권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제국주의적 수탈구조로 간주하고 스스로 사회주의 세계경제를 구성하고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세계경제로의 참여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봉쇄를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행하여 중국 권위주의체제의 정통성 기반인 경제발전을 약화시켜 공산정권의 정통성 위기로 내폭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⁸³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는 다자주의 국제레짐인 WTO 체제 아래에서 성공을 기약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가 제국주의적 수탈구조가 아니라 생산력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지향적 동아시아 모델에 의거하여 산업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최근 다자주의적 국제레짐인 W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하였다. 더욱이 미국이 대중국 경제봉쇄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 손실을 우려하여 동참할

⁸³ *Ibid.*

가능성이 적고 미국의 중국진출 기업들도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물론 미국이 WTO 체제를 위기상태로 몰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봉쇄는 세계경제질서를 붕괴시키고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야기함으로써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정당성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우선 반테러전쟁의 명분인 민주주의 확장을 통하여 중국과 연대할 수 있는 이슬람세력 및 위협세력을 제거하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부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이 석유확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 석유 수요의 충당은 물론, 중국전제를 위해서도 중동지역 장악을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두 곳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였고, 러시아 영향권에 있었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도 미군을 배치하였다.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지중해와 홍해로부터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포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외곽에서 포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패권적 지위 부상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은 전면적 경제적 봉쇄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 석유자원에 대한 부분적 경제봉쇄를 추진할 수도 있다. 중동국가들을 장악하여 중동 석유를 동맹국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중국은 원유수입의 7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미국이 중동지역을 장악하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컨대 미·중 패권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석유공급을 차단시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설정 가능하다.⁸⁴

원유확보를 위한 중국의 확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유해상 수송로를 봉쇄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석유봉쇄전략이 발동되면 해군력이 약한 중국은 원유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석유봉쇄 역시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간 패권전쟁 발발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의 중동 및 중앙아시아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군사거점 확보 시도는 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서 중·러간 반미연대가 초래됨으로써 미국의 중국 석유봉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정책에 대항하여 중국은 반테러전에 협력적 자세를 보이는 등 편승정책을 취하는 한편, 국방정책은 군사 현대화를 통하여 군사력 격차를 줄이는 균형화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미국의 MD 추진에 대하여 MD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등 핵 전력을 증강시킬 것으로 추정된다.⁸⁵ 또한 미국의 MD 개발이 러시아 핵 공

⁸⁴ 중국은 2001년 현재 석유소비량의 45%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5년도 경우 중동에서 전체수입량의 66%를 들여와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경련 보고서, 중국의 석유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2004년 10월 7일.

⁸⁵ 후진타오 주석은 8월 24일 “군비 증강은 전투 준비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안정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며, 특히 핵전력 증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군비 증강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19일.

격능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추진되면 반MD, 반패권을 매개로 한 중·러간 대항동맹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패권적 지위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은 과거 소련봉쇄정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대중국 군사적 봉쇄는 중국이 다자주의적 국제레짐인 WTO체제에 속해 있어서 유효성이 제한적이고, 제한적 규모의 석유공급 봉쇄전략 역시 평상시 사용이 극히 제한된 전략에 불과하다. 미국이 대중 군사적 봉쇄를 취할 지라도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에 유리하게 개편되어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이 군사적 봉쇄를 풀고 중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평화적 방식으로 중국중심의 일초다강체제, 미·중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이 중국봉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의 패권적 위상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예방전쟁을 시도하면 미국과 중국간에는 패권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 경우 전승국 연합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개편될 것이다.

(2) 예방전쟁

세력전이가 일어나는 초기단계에서는 지배국가가 도전국가의 세력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도전국가는 전쟁 승리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전쟁을 차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중국(도전국가)과 미국(지배국가)의 동아시아 정책에서도 그 실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⁸⁶ 만일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여전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에 위협

을 느끼면 미·일 동맹세력은 중국의 부상을 방치하지 않고 사전에 제어하기 위하여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방전쟁은 중국의 급격한 국력 신장으로 인한 세력전이 출현 이전의 잠재적인 도전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될 수 있다. 예방전쟁이 국가간 세력전이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 국가간 세력전이의 주요 원인으로서 경제발전 격차는 다양한 경제발전 양식 및 전략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예방전쟁은 타이완, 티베트 분리 독립 등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여 경제발전 전에 매진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을 파괴하는 한편, 전쟁 상황을 빌미로 대중 경제봉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⁸⁷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은 동반자외교, 다자주의 등 다극화전략을 토대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약화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미·일 동맹세력의 예봉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예방전쟁은 최종적으로 중국 권위주의체제를 전복시켜 중국의 민주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독립, 도농갈등 및 빈부갈등 폭발 등

⁸⁶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부상하고 있는 잠재적 패권국이 쇠퇴하고 있는 패권국에게 도발전쟁을 일으킨다는 세력전이론의 명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세력전이로 인하여 패권국에 의한 예방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논점을 전개하는 논문으로는 Steve Chan, "Exploring Puzzles in Power-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for Sino-American Relations," *Security Studies* 13, No. 3 (Spring 2004).

⁸⁷ 張文木, "科索沃戰爭與中國新世紀安全戰略," 戰略與管理, 1999년 제3기; 예츠청,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005), p. 271. 張文木은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과 선제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미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분열을 노려서 강대국으로의 등장을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경우 미국은 예방전쟁의 구실을 북한 핵문제나 대만문제로 삼을 수 있다. ⁸⁸

현재 중국은 탈냉전 후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구현된 WTO 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국력이 일정단계에 오르면 미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에도 도전할 가능성도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각도에서 잠재력이 무한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예방전쟁을 시도할 수 있고,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는 중·미간 패권경쟁을 촉발시킬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9·11 테러 후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으로 포위된 중국이 북한마저 미국 영향권 하에 배속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에 완전 복속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에 강력 반발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간 패권적 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미·중 간 대치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면, 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과 전략적 가치 때문에 본격적인 미·중 간 패권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민족통일 문제이자 동시에 남중국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

⁸⁸ 미국의 대중국 예방전쟁 수행은 대내외적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중·미간 전쟁상황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기업들, 반전주의 시민단체들은 물론, 세계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많은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 예방전쟁을 추진하기까지에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을 접수할 경우 아세안 국가들은 모두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화경제권으로 편입될 것이다. 미국 역시 대만을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준다면 미국의 중국견제전략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은 예방전쟁 수행을 위하여 주변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는 물론, 동반자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동맹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적대국가들을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각종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중국견제를 위한 포괄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의 동맹도 강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거나 외교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 복속시킬 경우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약화내지 러시아 포위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미국의 세력확장에 대항하는 반패권·반미 대항동맹을 중국과 결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증진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동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쟁탈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미·일동맹에 의한 예방전쟁이 발발하여 중국이 패할 경우 중국은 미·일 동맹세력에게 동아시아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동아시아는 미·일 동맹세력의 지도력에 의해 지역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일동맹이 예방전쟁에서 중국에게 패할 경우 패권국가 중국의 주도 아래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될 수 있다. 예방전쟁의 결과는 그 성격상 동아시아 질서를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승전국의 주도 아래 일초 다강 구도로 재편시킬 가능성이 크다.

(3) 도발전쟁

중국의 국력이 확장 일로에 있으며, 중국의 지역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일 동맹세력을 선제공격하는 도발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불만족국가로서 중국에 의한 도발전쟁은 세력전이이론에서 말하는 패권전쟁의 경우이다. 즉, 불만족국가가 지배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자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체제변화를 시도할 경우 체제위기가 발생하고, 곧바로 패권전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세력전이이론의 핵심명제이다.⁸⁹

그러나 이러한 상황 설정은 미국이 중국의 패권적 지위로의 부상을 미연에 제어하기 위하여 벌이는 예방전쟁의 경우보다 비현실적이다. 세력전이가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국력 격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중국에게 역전당할 수 있다. 이처럼 세력전이 중반 이후 미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상황보다 중·미간 세력분포가 미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세력전이의 초반에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방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⁸⁹ A.F.K. Organski, *World Politics*.

물론 경쟁국이 지배국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산업화를 진척시켜 기존의 국제질서를 자국의 주도하에 재구축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지배국이 이러한 시도에 저항할 경우 체제위기가 발생하고 패권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세력전이이론의 가정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WTO와 같은 기존의 다자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아직 정합게임적 질서에 의해 여전히 참여이익이 보장된다면, 잠재적 패권국이 패권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세력전이이론의 이러한 가정은 독일, 일본의 산업화가 진척되었으나, 그 당시 영국중심의 제국주의적 국제체제가 후발산업국으로 독일, 일본 등에 불리하게 형성·기능하여 독일, 일본이 패권국 영국 및 미국 등에게 도전하는 구조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오류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위하여 대중국 수출금지조치를 단행한다면 중국은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역내질서, 특히 중국봉쇄에 치중되어 있는 안보질서와 미국중심의 경제체제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도발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⁹⁰

이러한 도발전쟁이 이루어지기 전, 중국은 눈부신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던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한국에까지도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일본까지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립화를 도모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⁹⁰ 현재 국제경제질서가 다자적 국제레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국은 대중 경제봉쇄 목적으로 이를 부분적으로 형해화시킴으로써 중국의 대미도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대일 수출금지조치를 취하여 일본의 전쟁 도발을 유도한 바 있다. Scott D. Sagang,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s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 p. 324.

대외정책은 과거 소극적 다극화전략에서 벗어나서 주변국들과의 대항동맹을 형성하는 적극적 패권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쇠락하는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기존 동맹관계가 약화되고 미국중심의 경제질서도 흔들릴 수 있는 패권 위기상황에 봉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력전이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진척되고 나서 발생하는 중국의 도발전쟁은 미국의 패배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축소되어 중국은 강력한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과 한반도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에 편승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쉽다.

세력전이가 진행되는 중기이후 단계에서는 강력한 역내 도전국인 중국이 쇠퇴하는 지배국가 미국을 축출하기 위한 도발전쟁을 야기하기 전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고립주의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중국의 지역패권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청산하고 동아시아에서 고립주의를 선언하고,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향후 중국이 장거리 군사투사능력을 위시한 종합국력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보다는 중국과 돈독한 동반자 관계 수립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동반자 관계 확립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의 청산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과 미국의 주도 아래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미·중에 의해 주도되지만, 중국의 국력이 점차 증대된다면 중국에는 미·중 간에 패권전쟁이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중국주도의 지역질서로 개편될 것이다.

특히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세력전이가 진행되면서 중국이 점차 민주화되고 시장경제 체제를 체제이념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이 고립주의정책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주의적 정책을 취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중 간의 공동리더십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다자간안보체제나 집단안보체제로 발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안정과 평화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4. 동아시아 국제 안보질서의 성격과 그 변화 추이

가. 동아시아 국제질서 : 불균형적 양극체제

한국전쟁 후 냉전시기의 동아시아 질서는 소련, 중국, 북한으로 구성되었던 북방 삼각동맹과 미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되는 남방 삼각동맹의 균형적 양극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양극체제는 세력균형의 기본형 가운데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의 현상타과 전략에 대해 준비확충 등의 다양한 균형화전략에 의존하여 상대의 패권 장악 의지를 억지하는 직접적 대립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양극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삼국동맹과 삼국협상간의 대립,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연합국과 주축국간의 대립 등에서도 구현된 바 있다. 냉전시기 동아시아에서 양 진영의 세력이 대치

했던 대표적 장소가 바로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던 한반도였다.

냉전시기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경제의 불균등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력전이 때문에 소련, 중국, 북한의 북방삼각동맹은 거의 붕괴되는 등 심각한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운영하였던 소련 및 중국이 서방과의 체제경쟁에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북방삼각동맹은 약화되고 동아시아는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는 일초다강 구도로 재편되었다.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은 중국과 일본의 세력경쟁을 억제하고 중국을 서구중심의 국제사회로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가치체계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아시아가 미국중심의 일초다강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단독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있는 경성권력 및 연성권력 등에 의거한 지배력을 소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역내 강대국들 간의 세력경쟁이 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자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약화된 대륙 동맹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하여 유연한 봉쇄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한편, 연성권력 행사를 통하여 중국의 체제변화를 도모하였다.

<표 II-1> 동북아 국가별 국력지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한국	북한
인구	2억9,500만	13억600만	1억4,300	1억700만	2,290만	4,800만	2,300만
면적(km ²)	963만	960만	1,700만	38만	3만6,000	9만8,000	12만
GDP (억달러)	11조7,500	7조2,620	1조4,080	3조7,450	5,762	9,250	400
1인당 GDP(달러)	4만100	5,600	9,800	2만9,400	2만5,300	1만1,200	1,700
GDP 성장률	4.4	9.1	6.7	2.9	6	4.6	1.0
군사비 (억달러)	4553	354 (추정치)	194 (추정치)	424	421+	155	50 (추정치)

* GDP와 1인당 GDP는 구매력 대비 수치, 1인당 GDP는 2003년 추정치
 자료: 밀리터리 밸런스, 국방백서, CIA, SIPRI, 중앙일보, 2005년 8월 16일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 일초다강 구도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점차 양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⁹¹ 러시아는 탈냉전 후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초강대국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는 이미 강대국 지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탈냉전 후 러시아는 제한된 자원을 우선 일차적으로 자국의 경제건설, 그 다음으로 동유럽 지역에 배분해야 하며, 동아시아는 우선순위에서 3번째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핵심 산업시설이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랄산맥 서쪽으로부터 물자공급선이 엄청나게 긴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 러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지리적 여건, 경제적

⁹¹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자급도, 약화된 경제력으로 인한 군사력 약화 등으로 강대국이 지녀야 될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훼손당하여 지역적 극(Pole)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⁹² 이와 유사하게 탈냉전 후 일본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력 규모, 강대국에 걸맞지 않는 약한 경제적 자립도, 대륙세력의 공격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리적 약점 등의 요인으로 강대국 지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다.⁹³

이에 비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대륙세력을 대표하는 극(Pole)으로 점차 발전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은 <표 II-1>이 시사하듯이 2003년도 중국의 구매력 기준 국력은 미국의 62%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미·중 간 세력전이는 불균등 경제성장 속도로 인하여 앞으로도 지속되어 2010년 이전에 미국과 중국의 국력은 거의 균형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인구적 측면과 부존자원 측면에서 극(Pole)의 지위에 걸맞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천연자원 부존량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석유 부존량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나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석탄은 내륙지방에 엄청나게 부존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의 14억 인구는 장기적으로 훈련된 저가의 노동력 공급 및 거대한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다.

중국은 미국의 MD 추진, 일본의 재무장, 대만문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세적 정책 추진 등 미국의 패권주의적 동아시아전략에 대해 고도성장하는 경제력을 밑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충하는 등 세력균형 차원의 국방 현대화로 대응하고 있다. 중

⁹² *Ibid.*, pp. 86~90.

⁹³ *Ibid.*, pp. 90~92.

국은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공식 국방예산을 두 자리 숫자로 증액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있다. 미국은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기 위하여 중국 군사비 산정을 부풀려서 발표한 점이 있지만,⁹⁴ 중국도 중국 위협론을 축소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낮추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평가에 의하면 중국 군사비 지출액은 중국정부 발표보다 최소한 2~3배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⁹⁵ 이처럼 중국정부 발표치와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⁹⁶ 중국정부가 군사대국화 추진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서방세계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대륙세력을 대표하는 중국과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패권동맹에 도전하는 중국 중심의 반패권동맹을 결성하는 적극적 형태의 극(Pole)을 이루고

⁹⁴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편하고 선진무기를 대량 도입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타이완 해협 정세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및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 또한 중국위협을 암시했다.

⁹⁵ Anthony Cordesman,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Northeast Asia(CSIS), 2002) 미 중앙정보부는 3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4배,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4.5배, 미 랜드연구소 울프(Charles Wolfe)는 20배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호, “중국의 정치군사적 성장과 향후 전망,” *현대중국*, 창간호 (카톨릭대학교 중국연구센터, 1997), p. 95 일부 서방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국방예산 보다 실제로는 약 4배에서 7배까지 많다고 말하면서, 이 경우 GNP 대비 중국 군사비 비중은 미국과 유사한 3.5%에 이르며, 구매력 기준 국방비 비중은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⁹⁶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예산에는 군사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사 연구개발비, 방산업체 보조금 등은 정부의 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군이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예산에서 제외되어 있다.

있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 현대화 등의 내재적 균형화전략 추진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 다극화 전략에 기반한 동반자 외교를 통해 세력균형(balancing)을 도모하고 있는 등 소극적 형태의 한 극(Pole)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불완전한 패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완전한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대만분쟁 등과 같은 중요한 안보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⁹⁷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미국의 패권적 시도가 중국의 협조로 달성되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중심의 패권체제가 아니라 미·중 중심의 양극체제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은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상당 부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는 과거 냉전시기의 진영논리가 아닌 준진영적 양극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⁹⁸

그러나 <표 II-2>가 시사하듯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아직 이루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군대는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보급과 지원이 취약하며, C4I 상의 능력도 뒤쳐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⁹⁷ 동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Mastanduno, M., "Incomplete Hegemony: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Order in Asia,"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2003).

⁹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국양서원, 2005), pp. 20~25.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강대국과 구별된다. 핵 추진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30여기 등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서태평양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증강은 경제력 증대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 도시의 6~12%, 비행장의 1~3% 정도의 범위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탄도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국의 MD 개발은 중국의 핵 공격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핵 선제공격에 대한 중국의 보복공격 능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의 균형은 극히 중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표 II-2> 미·러·중 핵전력 현황

	미국	러시아	중국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550	725	3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MRBM)	0	0	110+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432	540	12
전략폭격기	203	240	180

자료: 밀리터리 밸런스, 국방백서, CIA, SIPRI, 중앙일보, 2005년 8월 16일 재인용.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군사적 불균형성은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의해 시정되겠지만, 군사적 전략적 균형을 이루기까지는 상당 기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⁹⁹ 중국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중국은 미국중심의 세계경제 질서 아래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기술, 자본, 시장 등은 해외의존도가 강하고 전략적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중심의 일초다강 구도로부터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이 상호 대립하는 양극체제(Unbalanced Bipolarity)로 변모 중이지만, 미국에 힘의 우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불균형적 양극체제이다.

특히 동아시아 양극체제의 불균형성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군에 의한 공세적 전략을 유도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길핀, 모델스키 등의 패권안정론에 의하면 국제체제의 안정성은 체제의 패권이 한 국가에게 귀속되어 있는 단극체제에 의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 반면, 세력균형론적 시각에 의하면 강대국간 세력균형이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가장 잘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실주의 세력균형론에서도 다극체제 안정을 주장하는 학자(모르겐소, 카플란, 호프만 등)있는 반면, 왈츠, 미어샤이머 등의 학자들은 양극체제의 안정성을

⁹⁹ 최근 중국정부는 미래전을 ‘첨단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으로 상정하고 이미 보유한 핵 억제력을 기반으로 하되, 그간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을 정보화·현대화하여 군사력의 해외투사 능력을 확대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과거의 ‘본토 및 해안 방어’에 국한된 군사전략으로부터 ‘적극방어 및 지역 세력투사’ 전략으로 전환하여, 2010년까지 동지나해 및 남지나 해양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갖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군이 보유한 전략 핵능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지만 최근에 잠수함 탑재 전략 및 전술 핵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는 주로 조기경보 능력, 공군력과 해군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대지 미사일 분야도 대만을 겨냥하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 중에 있으며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다양한 유형의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주장한다.

이 가운데에서 미어샤이머는 국제체제를 불균형적 양극체제(Unbalanced Bipolarity), 균형적 양극체제(Balanced Bipolarity), 불균형적 다극체제(Unbalanced Multipolarity), 균형적 다극체제(Balanced Multipolarity) 등 4종류로 분류한다. 그는 균형적 양극체제, 균형적 다극체제, 불균형적 다극체제 등의 순으로 체제 안정성 정도를 논의하고 있다. 가장 체제 안정성이 위협받는 국제질서는 불균형적 다극체제로서 세력분포가 잠재적 패권국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등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제체제이다. 반면, 균형적 양극체제는 양대 진영간 세력균형이 존재하므로 가장 안정적인 국제체제이다. 균형적 다극체제는 세력균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균형적 양극체제보다 국력 변화 및 동맹 변경으로 인하여 잠재적 세력불균형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다극체제는 잠재적 패권국이 등장할지라도 몇몇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세력균형 노력에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패권국 등장을 억지하는 반패권동맹을 적기에 형성하기가 어렵다.¹⁰⁰ 또한 핵무기 보유에 의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다극체제보다 양극체제에서 오인(misperception)의 가능성을 줄이고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균형적 다극체제가 균형적 양극체제보다 훨씬 불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어샤이머는 불균형적 양극체제가 현실세계에서 존재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는 불균형적 양극체제의 세력분포가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¹⁰⁰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p. 22.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¹⁰¹

현재 대립과 협력을 거듭하고 있는 미·중 중심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대립과 모순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 일본, EU 간의 전략적 모순은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경쟁이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주로 안보 차원의 모순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간의 모순관계는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등의 경제, 동아시아 안보질서상의 안보, 중화주의와 미국식 예외주의의 충돌, 더욱이 급격한 세력전이로 인한 패권국과 도전국간의 패권적 갈등 등 5개 방면에 걸쳐 있는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중 중심의 양극체제야말로 다른 국가간의 관계 보다 훨씬 더 패권갈등으로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¹⁰²

우선 동아시아는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는 안보적 차원에서의 우선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 및 유럽에서 특정국가가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고, 더 나아가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안보를 위협할 경우 미국은 우선 역내 강대국이 잠재적 패권국가 출현을 저지해주시기를 기다렸다가, 즉 위협의

¹⁰¹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 비극, p. 624.

¹⁰² 미·중 간 충돌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게도 역효과를 가져다 줄 요인이 많다. 미·중관계 악화는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기회 및 이익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중국소비제품으로 인한 미국시민들의 후생복지 수준의 저하를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로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테러리즘의 국제연대에 중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책임을 역내 강대국에게 전가(buckpassing)하고, 역내 강대국의 패권저지에 실패할 경우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무력 개입을 통해 파괴된 세력균형을 바로잡거나 미국주도의 지역질서를 창출해냈다.¹⁰³

독일이 제1차·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대륙에서의 지역패권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우선 프랑스, 영국 등이 독일의 패권 추구를 견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전쟁에 즉시 개입하여 독일을 패퇴시켰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역패권을 도모했을 때에도 미국은 태평양전쟁에 무력 개입하여 일본을 패퇴시켰다. 또한 소련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도 미국은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하여 소련의 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소련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유럽대륙에서 강력한 국가연합체인 EU 등장을 방지할 목적으로 소련 봉쇄를 목적으로 구성한 나토를 소련 붕괴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나토회원국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킴으로써 미래 러시아의 지역패권 추구를 사전에 억지하고 있다. 더욱이 18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력면에서 타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던 미국은 향후 10~20년 전후에 중국에게 세계 1위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

¹⁰³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
의 비극, 미어세이머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가 등장을 방지하기 위
한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인
(Christopher Layne)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는 세계적 차원의 패권을 획득할
때까지 팽창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어세이머는 공격적 현실
주의 이론의 본질에 못 미치는 변종(diet version)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Christopher Layne, "The 'Poster Child for Offensive Realism': America as a
Global Hegemon," *Security Studies* 12, No. 2 (Winter 2002/3), pp. 120~164.

었다. 이러한 상황은 급격한 세력전이를 가져와서 아시아 대륙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경쟁의 심화, 더 나아가 새로운 패권 국가 출현을 예고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지역패권 유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동의와 강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적으로 구분하면 강제는 봉쇄정책(containment) 및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 의한 전쟁, 동의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개입정책(engagement)으로 구분·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패권국가가 행사하는 정책은 동의와 강제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결합으로 나타난다. 순수한 봉쇄정책과 개입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등장한다. 동아시아에는 역내국가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체제간의 상이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현상타파 세력간에 암투가 있는 등 전략적 불확실성과 체제적 불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국가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강제 기제를 통하여 지역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상정한 봉쇄와 개입의 다양한 정책조합을 구사할 수 있다.

미국의 공세적 대중정책에 대해 중국은 사용 가능한 대외정책 수단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응적 현실주의(reactive realism)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공세적 대중정책을 피하는 방안으로 일본 침략에 대한 대항동맹, 소련위협에 대한 동맹 등에 이어서 미국과의 제3차 동맹 결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차 미·중동맹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종합국력을 육성하여 세계적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은 매우 낮다. 미·중 동맹 다음의 방안으로 양국의 평화공존 방안도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을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미국의 잠재적 패권에 대한 도전 억제라는 사활적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미·중의 평화공존 가능성은 매우 낮다.¹⁰⁴ 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해양세력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은 서남아시아, 인도양, 말라카 해협 등으로 이어지는 중동석유, 상품 등의 해양수송로(shipping lane)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양수송로가 중국에 의해 위협을 당할 경우 미·중 패권경쟁은 분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해양수송로가 해양세력 미국의 세력균형적 차원의 사활적 이익이라면, 해양수송로에 근접한 한반도 및 대만 등은 사활적 이익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대륙세력 중국을 공세적 방식으로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 기능을 하는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등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를 설치하였다. 대륙세력 중국은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양세력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해양권의 수호차원에서 해·공군력 증강 등 군사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상적인 대륙세력 중국을 제압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는 한편, 선제공격까지도 가정한 군사변환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¹⁰⁴ 예츠청,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pp. 358~361.

나.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 추이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초다강체제에서 중국의 급격한 국력 상승으로 인한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양극체제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매개되어 또 다시 미국중심의 일초다극체제로 환원되거나 미·중 균형적 양극체제 또는 미국 및 중국중심의 단극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불균형적 양극체제가 미국중심의 일초다극체제로 환원되는 경우는 중국경제가 높은 성장궤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중국 국력이 미·일동맹의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패권안정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안정적인 현상유지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예측하는 패권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은 현존 지역질서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균형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등의 사이에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현재와 유사하게 대립적인 일초다강체제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중국이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서 고도성장을 통한 국력증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이다.

다른 형태의 미국주도의 패권안정 구도는 미·중 간의 세력전이에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력 우위가 지속되거나 중국이 현 지역질서에 강한 불만족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상태로 미국

중심의 패권안정 구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안정은 중국의 사활적 안보이익(대만, 티베트)이 침해받지 않고, 미·중협력이 지속된다는 기대 하에서 미국의 지역패권에 대한 중국의 묵인과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¹⁰⁵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세력분포 변화에 의해 국제질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유효한 지역질서 구도의 예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불안정한 미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에 입각한 불균형적 양극체제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미·중 간 세력전이가 심화됨에 따라 균형적 양극체제로 가거나 중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로 전환되기 쉽다.

따라서 세력전이에 의해 동북아 국제체제가 균형적 양극체제나 단극체제로 변환되는 과정에는 역내·외 강대국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 미·중 간 세력전이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그것의 발전 경로(road map)는 과연 무엇일 수 있는가? 우선 일차적으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억지 강화,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및 미사일방어 계획 추진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동 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 추구,

¹⁰⁵ 황병무, “21세기 동북아 지역질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교수논총, 37집 (국방대학원, 2004), p. 25.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개입정책(engagement)을 추구하되, 정치·군사적으로는 봉쇄정책(containment)을 추구하는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을 지속할 것이지만, 석유자원 확보 등에서는 경제적 봉쇄정책을 암묵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분열 등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만일 미국의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이 중국의 분열, 민주화 등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균형화전략이 심화·확대될 경우 미국은 대외정책 노선의 정당성을 민주화 확대론 및 중국 위협론에서 찾고 북한문제 및 대만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대중정책 수순을 대중 예방전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특히 예방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중국의 민주화를 촉발시켜 소수민족문제, 도농갈등, 계층갈등 문제를 현재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종합국력 향상 노력을 무산시키고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 유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방전쟁의 결과에 따라 동아시아 질서는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나 중국중심의 단극체제로 재편될 것이다.¹⁰⁶

중국의 지역패권 저지를 위한 미국의 개입·봉쇄정책은 향후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뀔 경우 봉쇄보다는 개입정책 위주로 노선을 재정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의 대미 균형화전략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지역패권 확보는 보다 용이해질 것이

¹⁰⁶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수행하는 예방전쟁은 핵전쟁을 배제할 경우 최종적으로 중국의 승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진장이 동아시아에 한정될 경우 미국 조야의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전쟁 수행을 위한 미국의 자원을 완전히 동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육군 투사력이 중국 본토를 정복하기에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 중국의 도발전쟁을 유발시키거나 지역패권을 공유하는 지역 안보공동체를 창설하는 현상유지로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다. 또는 미국은 중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대립과 갈등의 동아시아 질서를 미·중의 양극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중국주도의 단극체제나 미·중이 주도하는 균형적 양극체제와 이를 매개하는 지역 안보공동체가 탄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미·중관계의 발전추이는 현재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패권경쟁 --> 예방전쟁 등의 수순으로 변화되든가, 패권경쟁--> 전략적 동반자 --> 도발전쟁 등으로 전이, 또는 패권경쟁--> 전략적 동반자 --> 미·중 균형적 양극체제 및 지역 안보공동체 형성 등으로 전환되는 3종류의 경로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선택 유형에 따라 한반도 및 동아시아 대내외적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 가운데에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중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체제 등의 문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하여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는 급진적 수정주의 전략(revolutionary revisionist strategy)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는 전쟁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극도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또는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상태로 산업화를 지속하지만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한반도 안보는 거대 중국의 ‘프랑켄스타인’적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과거 냉전체제의 유산인 한·미동맹,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설정 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가전략은 사회주의 봉쇄 및 북한 억지라는 전략적 측면에 치중되어 수립되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 결정요인에 의하여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안보전략의 전략적 의미를 재검토해 보고, 새로운 국가전략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III

우리의 대응전략

1. 기존의 안보전략에 대한 비판

가. 기존의 안보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 안보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대별하면 한·미동맹 강화론, 한·미동맹 유연화론, 주한미군 주둔과 평화체제 양립론, 한반도 중립화론 등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우선 한·미동맹 강화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자. 한·미동맹 강화론은 탈냉전 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편승(bandwagon)만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첩경으로 생각하는 시각이다. 더욱이 미국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적 차원의 패권을 유지할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만이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을 제어하고,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통제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동맹 강화론은 무엇보다도 남북 분단상황은 물론, 동아시아 차원에서 주도국 미국에 대한 편승이 한반도 통일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확실한 안보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시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은 편승전략의 핵심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존재는 한반도 평화의 담지자로 이해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많이 주둔할수록 한반도 안보가 보장된다고 이해한다.¹⁰⁷ 특히 한반도 주변 4국 중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

¹⁰⁷ 특히 한·미동맹 강화론은 한반도 주변강대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내의 강대국이므로 군비증강과 같은 한국의 균형화 노력은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따라서 유일한 안보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에 대한 영토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영토적 이익이 없는 국가이므로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등의 가치가 미국과 공동의 가치이므로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동맹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이해한다.¹⁰⁸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강화론은 동맹안보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

미동맹은 패권적 패트론의 군사력 주둔을 매개로 하는 군사 전략에 입각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종속 관계가 지배적이다. 위협의 인식, 유사시에 대한 정의, 군사전략과 전술적 대응의 방식에서 패권적 미국의 전략·전술을 한국은 추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미동맹에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더불어 이에 대한 한·미동맹의 안보태세는 미국중심으로 준비·추진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자신의 군사전략적 선택을 수직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미국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미동맹 관계는 “포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동맹의 안보딜레마(alliance’s security dilemma)’¹⁰⁹를 초래한다. 이러한 포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 역대정부는 자주국방정책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중

¹⁰⁸ 한·미동맹 강화론은 우리 학계의 주류 입장을 대변하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덕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4);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2003년 가을).

¹⁰⁹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77), pp. 180~199.

패권경쟁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한·미동맹이 지니고 있는 포기의 위험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한·미동맹은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인 분쟁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중 패권전쟁에 연계되는 “연루”의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을 동아시아 지역군화하고 대만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자동 연루될 경우를 우려하여 최근 주한미군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어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불균형은 한·미·일 삼국에 더욱 유리하게 조성되어 미국주도에 의한 한·미·일 삼국동맹은 대중국 포위압박을 가중시키는 등 선제공격에 의한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반입을 촉발시켜서 한반도의 미군기지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됨으로써¹¹⁰ 미·중 패권분쟁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미·중 패권전쟁의 전장으로 변할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안보딜레마를 초래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대항동맹 구축을 야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¹¹¹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등 미·

¹¹⁰ 이러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내 미군 군사기지를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¹¹¹ 미·중 패권경쟁이 강화되면서 2005년 8월 18일~25일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근역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유사시 한국과 주한미군, 일본과 주일미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상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신경보는 이에 대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한반도에 안정을 유지시키겠다는 목표도 이번 훈련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중·러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동아시아 지

중 패권경쟁을 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미동맹 강화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은 바로 한·미동맹 유연화 전략이다.¹¹²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상징적 수준의 전진작전기지(Forward Operation Bases: FOBs)만 남기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전략에서 동맹외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한·미동맹을 경성동맹(hard alliance)에서 유연동맹(flexible alliances)으로 전환시켜 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다자안보협의체 등이 양립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조성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³

특히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추진 이유는 “전통적으로 자주국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을 담당하려는 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독자적 국방만으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며 동맹국과 우방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¹¹⁴ 그러나 한·미동맹 유연화전략 논의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군비증강

역에서 팽창일로에 있는 미·일 안보동맹에 맞서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으로서는 9·11 사건 이후 중국 대륙을 해양과 중앙아시아를 통해 봉쇄해 들어오고 있는 미군의 군사적 팽창을 러시아와 공동으로 막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¹¹² 이삼성, “주한미군 전략의 변화와 한·미동맹 양식의 전략적 재검토”; 이철기,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개편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2004).

¹¹³ 이삼성, “주한미군 전략의 변화와 한·미동맹 양식의 전략적 재검토,” p. 74.

¹¹⁴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pp. 26~27.

이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안보딜레마가 증폭되면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한국정부의 선택은 동아시아에서 힘의 정치를 제약할 수 있고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에 현실주의적 접근보다는 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여 평화국가 지향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정체성 변화를 유도하고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⁵

한·미동맹 유연화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대량살상무기 개발 금지, 남북한 군축은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북한 핵문제 해결,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는 물론, 남북한 군축,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가 전제되어야 구축이 가능하다. 즉, 한·미동맹 유연화 논리는 탈냉전 후 존재하고 있는 남방 삼각동맹체제와 북방 삼각동맹체제의 전략적 불균형을 남북한 군축 및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 다자안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균형상태로 만들어야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귀착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동맹 유연화 논의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하고 있다. 과거

¹¹⁵ 구갑우·최영종·박건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제2호 (2005년 여름), p. 59.

냉전시기 한반도 냉전구조는 동서 양진영의 대결에 의해 구성되었으나, 최근 한반도 냉전구조는 미·중 패권경쟁에 의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 주한미군 문제, 북한 핵문제, 평화체제 전환문제 등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를 가정한 한·미동맹 유연화, 한반도 군축 등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주변 4개국의 동의를 확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지는 극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일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순이 단행되면 한반도는 중국의 전략적 작전 반경의 중심원에 위치하게 되므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군축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에게 극도로 불리한 동아시아 및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격한 현상변화를 의미하므로 미국이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수용할리가 만무하다. 더욱이 한반도 군축은 향후 미·중 패권경쟁이 패권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불특정 가상 적에 대한 균형화전략으로 군비 증강이 도모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미래는 조선말 상황으로 전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동맹 유연화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론은 그 적실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입장은 평화체제·주한미군 양립론이다.¹¹⁶ 북한 핵문제를 다자주의적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한반도

¹¹⁶ Michael O'Hanlon and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A Brookings Institution Book (New York: McGraw-Hill, 2003), p. 146.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 안보협의체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에는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한미군 역할에 기초한 한·미동맹 관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점진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와 대북 경제지원조치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타결하고, 한국, 미국, 북한이 상호신뢰구축 조치 및 군비 축소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축과 주한미군 주둔이 상호 양립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공존이 가능해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즉, 미국이 군사적 봉쇄정책 위주의 대중정책을 완화하고 대중 개입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 평화체제 전환문제 등의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 경우 주한미군은 대중국 선제공격을 가정한 패권정책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일본쟁, 남북관계, 영토문제 등의 다양한 분쟁을 억제하고 조정해나가는 조정자 및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을 부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개발·실시되지 않으면, 미국의 동아시아 현상유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양립방안이 적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수평적 관계 전환과 더불어, 주한 미군의 동아시아 지역군화를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주한미군과 군사장비의 출입에 관한 한국의 통제능력 및 주한미군 군사장비의 방어적 성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맹관계의 내부개혁에 미국이 동의할 때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병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으로 한반도 중립화론이 있다. 한반도 중립화 방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해체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¹¹⁷ 이 경우 10년 정도의 과도기간을 두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한 간 상호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 북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종결시키면서 중국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남북한의 중립적 완충국가화를 완성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정화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중립화론은 유럽의 중립국 사례가 시사하듯이¹¹⁸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중립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비록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중립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변화가 생기면 이러한 보장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예컨대 미·중 패권경쟁이 동아시아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¹¹⁷ 셸리그 핸더슨, 이흥동 외 옮김, *코리아 엔드게임* (서울: 삼인, 2003).

¹¹⁸ Michael Handel, 김진호 옮김, *약소국생존론* (서울: 대왕사, 1995).

한반도 안보는 중립화를 통해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최소한 현상유지전략을 취할 경우 한·미동맹 유연화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병존론, 한반도 중립화론은 실행 가능하고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표국가로서 중국과 미국이 현상타파를 기본으로 하는 패권경쟁을 벌일 경우 한·미동맹 유연화론, 한·미동맹과 평화체제 병립론, 한반도 중립화론 등은 한반도 안보전략으로서 그 유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논의는 최소한 미·중 간 패권경쟁에 따른 다양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전제한 안보전략 구상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한국의 역할 증대방안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만분쟁, 북한문제, 영토분쟁, 미·중 패권경쟁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한 안보전략도 개발해내야 한다.

나. 유럽 안보공동체 모델의 동아시아 적용 가능성과 한계

최근 한국 학계에서는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질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냉전 전후 유럽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예컨대 앞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한반도 안보전략 대부분도 동아시아 안보위험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냉전 전후 CSCE 및 OSCE 등의 유럽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다. 이 경우 다자안보체제 연구의 대부분은 각국이 절대안보 원칙에서 상대의 안보도 동시에 고려하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면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하다는 구성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자안보협력의 현실주의적 기반이 군사력 균형이 달성된 “균형적 양극체제”라는 점을 논의한 다음, 동아시아의 경우 일초다극체제가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다. 절대안보에서 협력안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세력균형, 문화적 동질성 등 다양한 조건들이 요구된다고 분석한다.

(1) 유럽에서의 공동안보 형성의 제 조건

유럽의 경우 냉전이 시작되면서 동서 양 진영은 흡수적 무정부의 상태의 국제체제에서의 세력균형을 통한 국가안보 구축방식에서 벗어나서 억지(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 개념에 입각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등의 집단방위(collective self-defense)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억지와 봉쇄 위주의 안보전략에 입각한 이러한 집단방위 체제는 오인(misperception)에 의한 위협의 증가를 가져오는 절대안보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미· 소를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은 NATO와 WTO가 추구하는 절대안보가 위험하고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를 공동의 문제로 보고 진영간의 신뢰구축, 이해증진, 군축 등을 통해 공동안보를 도모하는 것이 안보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지역은 현재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역사적 유산, 지역안보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대만·북한문제, 그리고 미래 동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 세력경쟁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안보질서가 평화적으로 유지·관리되었던 원인은 집단방위체제로서의 NATO와 WTO 이외에도 양진영간의 안보질서를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했던 지역 다자안보협의체로서 CSCE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원래 소련이 범유럽안보회의를 제안한 배경에는 모든 형태의 동맹을 해체하고 미국을 배제한 채로 유럽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소련의 제안은 서방에 의해 거부되었다. 서방진영 사이에도 NATO와 CSCE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었다. CSCE를 NATO의 하위체제로 보는 견해와 CSCE를 NATO의 보조적 기능부여로 출발하되 점진적으로 NATO와 동등한 지위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CSCE를 NATO의 하위체제로 보는 견해가 채택되었다.¹¹⁹ 이와 유사하게 동방진영도 WTO를 집단방위체제로 유지하면서 서방의 NATO에 대응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NATO와 WTO의 집단방위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이 패권적 균형자(hegemonic balancer)로서의 역할이다. 미국과 소련이 서유럽과 동유럽에 패권안정적 역내질서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적 양극체제를 구성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미국은 서유럽에서 지역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안보질서를 조정하고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NATO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소련도 서방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동맹으로 WTO

¹¹⁹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동북아 외교·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연계추진 방향, p. 20.

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균형적 양극체제가 유럽에서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유럽은 잠재적 패권국가 등장 및 오산(miscalculation)의 증대로 인한 분쟁 기회가 증대될 수 있는 불균형적 다극체제가 등장할 수 있었다.¹²⁰ 더욱이 균형적 양극체제는 우발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진영간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공동안보체제로서 CSCE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 진영간 세력경쟁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 변화를 유인해냈다.

그러므로 현상유지를 정책 목표로 하는 균형적 양극체제 존재 여부가 특정지역 안보질서의 안정과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¹²¹ 양극체제의 내부구성은 NATO와 같은 집단방위체제 존재 여부 또는 양극을 구성하는 초강대국과의 군사동맹 존재 여부에 의해 나누어질 수 있다. 만일 균형적 다극체제가 체제 내부에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을 갖추고 있다면, 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의체는 예방외교에 초점을 두는 공동안보나 협력안보를 지향하지 않고, 침략행위에 대한 강제력이 부가된 집단안보 성격을 지닌 기능을 갖추어야 역내 안보질서가 성공적으로

¹²⁰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 비극, pp. 638~639. 불균형 양극체제, 균형적 양극체제, 불균형 다극체제, 균형적 다극체제 등의 국제정치 구조에서 균형적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며, 불균형적 다극체제가 가장 불안정한 국제정치 구조이다. 불균형적 다극체제는 양극체제보다 많은 안보위험을 배태할 수 있다.

¹²¹ 다극체제에서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는 CSCE가 균형적 양극체제에서 탄생되었고, 그 후 CSCE가 OSCE로 변화된 원인이 미국과 러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 아래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역내 안보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군사적 강대국인 러시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구갑우·반건영·최영중,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연구,” p. 56.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개의 적대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체제의 대결구도는 집단방위체제 또는 방위동맹의 억지전략과 다자안보협의체의 협력적 기능에 의해 완화되는 반면, 다수의 적대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다극체제는 보다 강력한 집단안보체제가 구성되어야 안보위협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발전되었던 원인을 기능주의나 신기능주의 이론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기능주의 입장은 국가간 상호의존성 증가가 경제공동체를 형성시키고 경제공동체를 통한 상호 교류·협력의 관행이 생기면 국가간 정치·군사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익일효과(spill-over effect)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기능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와 교류협력이 자연적으로 정치·군사안보 협력체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정치적 결단과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정치군사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 안보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²² (신)기능주의 시각에서는 유럽의 평화와 안정이 관리된 점을 유럽의 경제통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경제통합의 효시로 알려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독일 군수산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1952년 구성되었으며, 그 후 1957년 구성된 유럽경제공동체 역시 WTO에 대한 반패권동맹을 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불 갈등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하고 냉전기 서유럽의 결속을 필요로 했던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추진되었다.¹²³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냉전기 유럽공

¹²² 홍용표,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의 이론적 틀,” 박종철 외,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제 형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0~11.

¹²³ 유럽통합을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냉전기 유럽통합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유럽의 결속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추진되었고, 탈냉전기

동체는 균형적 양극체제의 한 축인 서유럽의 균열을 방지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안보이익을 조정해내는 패권적 조정자로서 미국의 지도력을 부조해주는 기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기본으로 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서 각 국가의 힘을 상당 부분 집합적으로 관리했던 CSCE는 동· 서 양대 진영이 군비확장 등의 절대안보 추구를 통한 세력균형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비확장을 자제하고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을 추구하려는 미·소 양대 진영의 대외정책 변화에서 기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미·소 양국은 냉전시기 무한대의 군비경쟁을 통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었고, 더 이상의 군비경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정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경험을 일반화하면 강대국들간의 다자안보협의체는 강대국들이 최소한 공동생존(joint survival)에 초점을 두는 현상유지적 세력균형화전략을 추진해야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이 CSCE의 바구니 1에 명시된 인권조항과 바구니 3의 인도주의 및 기타분야 협력을 관찰시킨 것은 과거 상호불신에 입각한 상호확증파괴와 같은 경성권력(hard power)을 행사함으로써 소련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기는 안보전략 대신, 적정 수준에서 전략적 균형을 이룬 다음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과 같은 연성권력(soft power) 행사를 통해 사회주의권의 내부붕괴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전제되었던 것이다.

에는 미국의 세계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 국제역학적 측면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

CSCE가 유럽에서의 동서 양대 진영의 갈등을 완화하고 안보 위협을 경감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권의 평화적 체제변화를 이루어내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중·일, 한·일은 물론 미·중 간 패권경쟁 등 잠재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북핵문제, 양안문제, 영토분쟁 등 안보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다.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전통적 국가주권개념에 매달려 있으므로 배타적 민족주의의 충돌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간의 급격한 세력전이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견인해내면서 각 분야의 선진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 거론된 안보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평화적 안보질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목표도 표류하기 쉽다. 그러므로 대부분 한국 학계는 한국의 안보상 가장 큰 과제가 21세기 유럽안보협력체(CSCE)와 유사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분석했듯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었던 안보공동체는 다양한 안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결과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추론되는 문제제기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질서 확립을 위해 유럽의 CSCE 모델을 동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서구 전문가들은 CSCE의 아시아 적용가능성에 대해 “사실 지난 5~6년 동안 CSCE의 구조와 정책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의가 있었다. 그러나 동 지역이 역사, 문화, 군사력 구조, 국내정치, 경제발전 정도 등의 측면에서 명료하게 나타나는 상이성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 간의 적대성과 대결성, 국가들 간의 비접촉적 성향, 위협에 대한 상이한 시각 등으로 인해 CSCE 기제들의 적용상에는 커다란 논란이 일어났다”면서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¹²⁴

CSCE 다자안보협력체를 동아시아에 적용하기 어려운 요인은 다음과 같다. 미·소중심의 동·서 양 진영은 냉전시기 유럽에서 무한대의 군비경쟁을 통하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과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를 이루었고, 재래식 안보경쟁을 통한 군사력 균형을 상당 정도 달성했다. 이 때문에 군비증강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동되는 단계에 이르는 등 더 이상의 군비경쟁이 무의미한 전략적 균형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동·서 양대 진영이 군비확장 등 절대안보를 추구함으로써 현상 타파를 도모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비확장을 자제하고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을 추구하려는 미·소 양대 진영의 대외정책 변화에 CSCE가 형성될 수 있는 기본 동인이 있다. 유럽의 경험을 일반화하면 강대국들 간의 다자안보협의체는 강대국들이 최소한 전략적 균형에 도달한 가운데 공동생존(joint survival)에 초점을 두는 현상유지적 세력균형화전략 추진 여부가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의 필요조건이다.

¹²⁴ Janic K.M. Heppel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Northeast Asia: Examining Multilateral and Bilateral Dynamics at Work” (1994) <<http://69.44.62.160/archives/pub/ftn/napsnet/oldpaps/heppel>>; 손기웅,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77~78.

물론 유럽처럼 미국과 같은 패권적 조정자가 존재하는 집단방위체제와 함께 다른 집단방위체제와의 군사관계를 조정하는 다자안보협의체가 병존하면 지역 안보는 평화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초강대국과 지역국가들과의 쌍무군사동맹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극체제는 집단방위 체제가 있는 경우보다 다자안보협의체가 구성되기 어렵다. 역내 국가들이 초강대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으나, 역사적 유산,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역내국가 상호간의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방위체제 구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방위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진영에 대한 통일된 의사결정과 행동원칙을 수립하기 어렵고, 양극체제의 의사소통 통로로서 다자안보협의체 구성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조정자로서 미·중으로 대표되는 진영내부의 집단방위체제 존재 여부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는 군비경쟁이 확대일로에 있는 등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탈냉전시대의 세계 안보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유동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안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절대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탈냉전 이후 중요한 전략 환경의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소련의 붕괴, 식민지 지배경험, 중국의 부상, 북한문제, 일본의 우경화 경향, 미국의 일방주의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동아시아는 일초다극체제가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변모해가는 역학구도 아래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의 첨단화와 군비증강 추세,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면서 협력과 갈등, 공조와 대립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전략과 미·중 패권갈등,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 일본과 중국의 역내 주도권 경쟁, 중국·대만의 갈등,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등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타파 내지 현상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다. 이외에도 동아시아에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적 관성에 의해 개별국 시장의 통합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요소는 19세기 말 국가주권을 회복한 동아시아 제국에 국가주권 이양에 대한 거부감 및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해 경제공동체 형성은 물론, 안보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형성될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경제력 측면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수세적 위치에 있는 중국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대응하는 한편, 경제발전과 이에 기반한 군사력 증강 및 다극화전략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균형화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이 가장 유리한 안보환경은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이 형성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고 패권경쟁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경성권력 행사가 아닌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의 연성권력 행사에 의해 추동되는 경우이다. 그러

나 작금의 현실은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미국 우위의 전략적 불균형 상태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력 증대 및 군사력 증강에 따라 현재의 미·중 간 전략적 불균형 상태는 점차 전략적 균형으로 변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미·중 간 전략적 불균형 상태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보공동체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향후 동아시아 안보전략

가. 기본방향

국민의 정부 이래로 참여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실현,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 및 북한의 개혁·개방 환경 조성, 동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초를 다지는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는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전통적 주권국가 개념에 머물러 있는 절대안보 추구로부터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비감축 등은 물론, 우발적 분쟁을 방지하는 예방 등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협력안보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극히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미·중 패권경쟁 --> 예방전쟁 등의 수순으로 변화되든가, 패권경쟁--> 전략적 동반자 --> 도발전쟁 등으로 전이, 또는 패권경쟁--> 전략적 동반자

--> 미·중(불)균형적 양극체제 및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 등으로 전환되는 3 종류의 경로 가운데 마지막 경로가 한반도 안정 및 평화, 평화 통일 등의 우리의 국익 추구에 가장 유리한 발전추이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촉진·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안보환경은 동(북)아시아에 미국 중심의 일초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 안보제도로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체제가 구성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중국이 점차 민주화의 길을 밟으면서 미국과의 이념적 갈등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미국은 집단방위체제에서 패권적 조정자로서 기능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갈등을 완화·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례는 유럽의 NATO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중국이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 추진은 NATO와 같은 집단방위체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중국·대만, 남·북한, 일본·중국, 한국·일본 사이에도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영토분쟁 등도 동(북)아시아 집단방위체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안보공동체로서 동(북)아시아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방위체 구성을 현 시점에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안정된 한반도 안보환경을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추동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무엇인가? 이는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미·중 간 전략적 균형에 의한 세력균형이 확립된 균형적 양극체제이다. 이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상대

의 핵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보복공격을 통해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및 “공포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고 재래식 군비에서도 상당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극체제이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국중심의 일초다극체제가 중국의 국력증강에 따라 미·중 양극체제로 개편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향후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핵 전력과 재래식 군사력 수준도 미국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2010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동아시아 질서는 균형적 양극체제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균형적 양극체제 하에서 양극체제의 안보대화·협력의 통로로서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면,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은 현상유지 형태로 전환되고 남북간에도 화해와 협력 기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당분간 지배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미국은 비대칭적 국력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상타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차적으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미사일방어 계획 추진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동 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 균형 추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개입정책(engagement)을 추구하되, 정치·군사적으로는 봉쇄정책(containment)

을 추구하는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을 지속할 것이지만, 석유자원 확보 등에서는 경제적 봉쇄정책을 암묵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민주화 등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만일 미국의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이 중국의 분열, 민주화 등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균형화전략이 심화·확대될 경우 미국은 대외정책 노선의 정당성을 민주화 확대론 및 중국 위협론에서 찾고 북한문제 및 대만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대중정책 수순을 대중 예방전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세력전이 일어나는 초기단계에서는 지배국가가 도전국가의 세력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도전국가는 전쟁 승리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전쟁을 차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중국(도전국가)과 미국(지배국가)의 동아시아 정책에서도 그 실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¹²⁵ 특히 예방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중국의 민주화를 촉발시켜 소수민족문제, 도농갈등, 계층갈등 문제 등을 현재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종합국력 향상 노력을 무산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 유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방전쟁의 결과에 따라 동(북)아시아 질서는 미국중심체제나 중국중심체제로 재편될 것이다.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미국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는 현상타파적 안보전략을 실행할 경우 한

¹²⁵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부상하고 있는 잠재적 패권국이 쇠퇴하고 있는 패권국에게 도발전쟁을 일으킨다는 세력전이론의 명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세력전이로 인하여 패권국에 의한 예방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논점을 전개하는 논문으로는 Steve Chan, "Exploring Puzzles in Power-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for Sino-American Relations."

반도도 미·중 패권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작금의 불균형적 양극체제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질서 안정을 촉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먼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중 간 세력전을 방지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입정책(engagement) 위주의 동아시아정책을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개입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인권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체제변화를 도모하게 만드는 대외정책이다. 이 경우에도 개입정책은 관계악화에 따른 우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군사봉쇄정책과 더불어 시행되지만, 정책적 우위는 공격적 성격을 지닌 대중국 봉쇄정책(containment)보다는 군사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연성권력 행사에 입각한 개입정책(engagement)에 주어져 있다. 즉, 한국의 동아시아정책은 미국이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하는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현상타파가 아닌 현상유지 전략으로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비록 불균형적 양극체제이지만, 미국이 한·미/미·일동맹의 기반 위에서 현상유지적 안보전략을 수행하면서도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를 토대로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의 연성권력을 행사한다면, 중국, 북한 등의 체제변화를 견인해냄으로써 미국중심의 패권안정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되어 미국의 국력과 대등하

게 될지라도 중국의 점진적인 체제변화가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가장 유익한 방식이라는 점을 미국에게 설득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 상호간에는 평화가 유지된다는 민주평화론에 입각,¹²⁶ 중국의 민주화가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담보해주는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중국의 지역패권 저지를 위한 미국의 봉쇄정책은 봉쇄보다는 개입정책 위주로 노선을 재정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는 미국과 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미·중이 주도하는 안보공동체를 창설하는 등 지역패권을 공유하는 한편, 패권경쟁이 안보경쟁보다는 연성권력 경쟁으로 전환되게 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미국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대립과 갈등의 동아시아 질서는 미·중이 주도하되, 갈등정도가 낮은 균형적 양극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정부는 우선 동아시아 안보위협으로 등장한 북한

¹²⁶ 민주주의 국가 상호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역사적 경우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간 전쟁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확산이 보다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창출할 것이라는 연역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가들은 자신의 통치기반을 외부의 적을 상정하거나 전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둘째, 민주주의 체제의 시민들은 전쟁 발발 시 생활기반 파괴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호전적인 인사 및 정당을 국가지도자나 집권당으로 선출하지 않는다. 셋째, 법의 지배에 익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보편적 국제규범 및 가치를 추구하며,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불건전한 정책과 가치들을 토론을 통하여 걸러내는 민주적 논쟁문화를 가지고 있다. Challes A. Kupchan and Clifford A. Kupchan, Concerts, "Collective Security and the Future of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1 (Summer 1991), p. 149.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토대를 닦는 등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련의 붕괴, 중국의 개혁·개방 등으로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파괴됨에 따라 북한이 세력균형 회복 차원에서 체제보장 및 경제원조를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획득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은 북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 체제변화 내지 붕괴를 유도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중국붕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정권의 붕괴가 친미적 통일한국을 탄생시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한반도 현상타과정책을 반대하고 있다.¹²⁷ 한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위협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 핵 포기에 따른 북한 체제보장 및 북·미관계 정상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의 수순을 통해 한반도 화해·협력 및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양극체제의 소산

¹²⁷ 2005년 8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극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몽골과 연대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한다는 판단에서 양국이 군사적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평화의 사명 2005’라는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 지에광진빠오(解放軍報)는 이번 훈련이 잠재적 적에 대한 위협과 견제의 성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며 경계하는 미국과 그에 맞서 러시아, 인도 등과 연합하는 중국의 대응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또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의 붕괴 가능성까지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신냉전체제의 새로운 전선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조짐이 대두되고 있다.

물이다. 과거 유럽에서 북한 핵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바로 독일 문제였다. 양대 진영으로의 유럽 분단은 패권경쟁 속에서 안보경쟁을 낳았고, 이러한 균형적 양극체제로 상징되었던 유럽 분단 구조는 동·서독의 분단과 갈등 구조를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미·소 양국이 현상타파적 안보전략을 현상유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독일분단 구조는 점차 CSCE 등의 구성 및 활동으로 유럽 분단구조가 해체됨에 따라 교류·협력의 증대, 평화통일 등으로 귀착되어 궁극적으로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만일 동아시아도 유럽의 경우와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연성권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불균형적 양극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기본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가 탄생되고, 이와 병행하여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풀려질 것이다. 더욱이 동아시아 질서가 불균형 양극체제가 균형적 양극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처럼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정부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현상타파가 아닌 현상유지 전략으로 유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균형적 양극체제로 전환되도록 온갖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고려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자체적 준비 증강을 추진하여 동맹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방력 증강을 통해 미래의 세력균형의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 불균형적 양극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전략적 불균형

을 균형상태로 잡는 역할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안보역량 확충을 통하여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가안보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현상유지적 동아시아 정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구조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 억지 및 동아시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각종 통제장치를 개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관한 우리정부의 시각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

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평화,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천명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미·중 패권갈등에서 전략적 선택이 어려운 동남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못하도록 적극 방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의 평화교육 및 운동을 적극 지원하거나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의 민간단체들의 평화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흡수적 형태의 “적대적 세력균형” 상태를 로크적 형태의 “친화적 세력균형” 형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역내국가들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민족국가 중심의 주권개념 및 국익추구의 가치정향성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나. 미래형 동북아시아 균형자의 가능성과 한계

2005년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전을 밝힘으로써 동북아 균형자론을 처음 언급하였다. 2005년 3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언급은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군의 역할, 10년 이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과 더불어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시사하듯이 동북아 균형자론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이며,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동북아 균형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도덕적 방법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근거로서 “강력한 군대,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제력, 민주화 실현, 평화 지향적 역사” 등을 거론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핵심 요소로 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 모델은 유럽연합(EU)이다.¹²⁸ 참여정

¹²⁸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소르본느대학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EU는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유럽은 EU 통합을 통해 제국주의시대의 약육강식과 극단대립을 극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북아에도 이러한 질서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 그는 “과거사의 앙금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북아에 또 다시 배타적 국수주의가 등장할지 모르는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의 구체적 모형

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건설을 영세중립국 수립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주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수단은 연성권력(soft power)과 경성권력(hard power) 모두를 정책수단으로 삼는다. 우선 먼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도덕적 포용’을 그 수단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도덕적 포용’은 한반도 주변정세 및 동북아 갈등요인을 연성권력 행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역내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말 소르본느 대학 강연에서 한국이 도덕적 포용의 주체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통합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중·일 양국이 동아시아를 주도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한국은 평화적인 역사를 갖고 있고, 독창적인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다가,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도덕성에 기초한 연성권력 이외에도 국방력 증대에 기반한 경성권력을 외교·안보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05년 국군의 날 행사 연설에서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의 구도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의 세력이 각축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패권적 국수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과 대립의 벽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

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EAC)를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04년 12월 7일.

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가하여 노 대통령은 “우리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호만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고 모든 평화의 프로그램은 힘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¹²⁹ 이러한 경성권력 육성방안으로 국방개혁안을 들면서 노 대통령은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정예 강군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국방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발전 등으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한층 배가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역내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이 패권분쟁으로 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역량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비전속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한반도는 또 다시 강대국 정치와 패권 경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 동북아 정세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선 일차적으로 미국과 함께 중· 일 갈등의 조정역할을 하며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가 미· 중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한층 더 불안정한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과 중국의 균형과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상당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³⁰ 예컨대 노 대통령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

¹²⁹ 연합뉴스, 2005년 10월 1일.

¹³⁰ 동북아 균형자론은 경성권력에 기초한 균형자론에서 연성권력에 의거한 균

행사를 통해 우리 군은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국가안보의 자주성 확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방기와 연루”의 동맹 안보딜레마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¹³¹이라고 말하는 등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 논리로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하였다.

협력적 자주국방 논리에서의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상호 보완성에 내포된 의미는 북한 핵문제, 한반도 주변정세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안보이익의 조화 및 조정을 추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 우리의 안보이익이 상당 정도 침해될 경우에는 동북아 균형자 논리 및 자주국방 노선에 의거, 우리 안보의 사활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어 갈 때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무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거나 중국의 패권도전 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체계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거나 주한미군의 장비 및 군대 이동을 전격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을 때 전제될 수 있다.

한국이 중·일/미·중 세력경쟁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

형으로 그 의미가 후퇴하였고, 그 대상도 미·중 관계에서 중·일관계에서의 균형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군비증강, 3군 균형발전 및 자주국방 추진 등의 요인은 경성권력 육성을 통한 미·중 패권경쟁에 대비한 장기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¹³¹ 연합뉴스, 2005년 10월 1일.

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원래 균형자는 세력이 비슷한 몇 국가들이 존재할 때 세력균형이 깨질 경우 특정 국가가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적 역할을 할 경우 이 국가를 균형자(balancer, holder of the balance)로 부른다. 이러한 균형자의 전형은 19세기 대영제국 시절 영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 영국은 유럽 대륙국가들과 동맹을 맺지 않는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다가 대륙 특정국가가 팽창주의 정책을 취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반패권동맹을 결성하여 유럽의 세력균형을 회복시키는 균형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균형자 역할의 전제조건은 역내 세력균형이 파괴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가 파괴된 세력균형을 바로잡을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일초다강체제가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적 세력균형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미·일동맹은 북한 핵문제 및 중국의 패권도전을 무력 사용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이 지역적 세력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을 혁명적 현상타파세력이 아니라 현상유지적 안정자로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만약의 경우 사용가능한 힘을 축적·보유해야 한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생존과 영향력 확대를 하기 위한 중국적 수단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1위권이지만,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하면 상당 정도 뒤떨어진 수준이다. 국방비의 상호 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5%, 일본의 40%, 중국의 50%, 러시아의 80% 수준에 있다. 동아시아 안보위

협에 제대로 대처하고 균형자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가장 열등한 군사력 수준을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5년 9월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언급은 미·중 패권경쟁 및 중·일 세력경쟁을 직접 겨냥한 것이기 보다는 4차 6자회담이 타결되기 전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을 견제하고 북한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기 위한 외교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선제 정밀공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의 중국보쇄정책에 중요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충지는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다음의 주요 동맹인 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시도는 힘을 통해 균형을 추구하기 보다는 한·미 동맹관계 변화에 따른 미국의 영향권 축소 가능성을 간접 경고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중·일 세력경쟁, 북한 핵문제, 대만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극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구도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력 증강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래에 실행 가능한 미래형 균형자론일 수밖에 없다. 만일

힘이 전제되지 않는 세력균형은 강대국 사이의 세력균형에 의해 국가독립이 유지되는 약소국의 운명, 즉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의 조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의 벨기에 등의 경우처럼 수동적 세력균형일 수밖에 없다.¹³² 이러한 수동적 세력균형은 강대국 사이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거나 비밀협약에 의해 특정국가들이 약소국 영토를 분할·획득하게 함으로써 약소국 주권이 위협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 한국이 맡을 수 있는 미래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불안정한 동북아 세력균형을 미래 한국 국력의 증대를 기초로 능동적으로 복원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한국의 안보이익에 유리하게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가 국가독립과 주권을 강대국의 세력 경쟁에 맡겨두는 영향권(spheres of influence)으로 전략하기 보다는 스스로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균형자적 노력에 의해 능동적으로 국가독립과 주권을 보전해 나간다는 미래형 대외전략이다. 예컨대 미국이 대중국 예방전쟁 및 북한 핵시설 정밀 폭격을 도모하는 경우는 물론, 향후 반응적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에 머물러 있는 중국이 팽창주의적 정책으로 정책 기초를 전환할 경우에도 한국은 증대된 한국 국력을 바탕으로 이들의 영향력 제고를 바로 잡는 세력균형 정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¹³² 세력균형 이론에서 경쟁형(pattern of competition)은 강대국 A국과 B국 사이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서 약소국의 독립이 보전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강대국간 세력균형이 세력전이에 의해 파괴되어 큰 힘을 지닌 국가가 현상 타파 정책을 추구할 때 약소국의 독립은 매우 위태롭게 된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p. 172~190.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 국방력 증대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적 수준의 강대국(regional power)으로 등장하기 전에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한국의 동아시아 균형자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한국의 역할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여 국가주권을 유지하거나,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전략적 동맹을 체결하여 향후 형성될 동아시아 질서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미약한 방안이다. 특히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불균형적 양극체제가 패권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한반도는 과거 한국전쟁처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세력경쟁을 벌이는 전쟁터로 변하고, 더 나아가 남과 북도 양 세력의 일원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다. 내재적 균형화전략

한국 국방의 과제는 북한 위협과 더불어 미·중 패권경쟁 및 중·일 세력경쟁 등에 의한 잠재적 위협 등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과거 한·미동맹에 의존해 왔던 한국의 안보전략은 미·중 간 세력전이에 따른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변화, 역내 국가들의 안보전략 변화 및 군비경쟁 등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요망되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은 대북 및 대중·소 봉쇄전략에 따른 전진배치 전력은 물론,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¹³³ 부시 독트린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한다. 즉, 냉전시대의 억지(deterrence) 및 봉쇄(containment) 전략과 같은 피동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공격을 받은 후에 보복하는 전략보다는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은 핵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지속시키되, MD 개발을 통하여 상대편 핵전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미국의 패권구도에 어떠한 도전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역내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안보이익을 확충하기 위하여 앞에서 논의한 동아시아 세력균형 유지차원에서 자주 국방력 증대에 매진해야 한다.

자주국방의 목표는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더라도 북한의 침공을 억제할 정도의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중 패권경쟁, 중·일 세력경쟁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역내 국가들과의 동맹관계 형성을 통하여 상당 정도 제어할 정도의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1위), 일본(3위), 중국(2위, 구매력 기준) 등 주변국에 비하면 한국의 경제력 수준은 상당 정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미·중 패권분쟁, 미·일 세력경쟁 등의 동아시아 분쟁요인을 안정자(stabilizer)로서 조정하는 능력을 소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불안정한 세력균형을 주변국과의 동맹관계의 조정으로 균형상태로 회복시켜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안정화시키는 역

¹³³ 김태우,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한국군사 , 2001년 1월호.

할을 하거나 고강도 분쟁 시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경략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억지력을 지닐 수 있다.¹³⁴

이러한 억제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참여정부 출범 전후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7% 정도에 머물렀으나, 2004년 약 3.2%, 2005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9% 이상 증액될 것으로 보여진다.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하여 국방예산이 2015년까지 매년 11%씩 늘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산이다. 특히 2020년까지 전력투자비로만 289조 원이 필요하고 경상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¹³⁵ 만일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이 수반된다면 세계 평균인 GDP 3.5% 국방예산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2003년 현재 한국 국방예산 가운데 경상운영비 67.1%, 이 중 인건비는 43.5%로 지나치게 병력위주의 군사구조를 갖고 있다.¹³⁶ 따라서 정보·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 변화에 따라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군 구조를 기술집약적인 군 구조로 전환시켜 장사정·초정밀 무기체계에 기반한 네트워크 중심전(NCW)에 대비해야 한다. 병력집약형 전력구조를 축소시켜 발생하는 예산절감분은 기술중심 전력구조로의 전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우리정부가 동아시아 국제정세 및 동맹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국방개혁을 한다면, 한미연합방위체계 속에서 미국의 군사

¹³⁴ 만일 주변국들이 고강도 분쟁에서 한반도를 경략하려고 할 경우 상당 정도의 전력손실과 피해를 입는다고 전제할 때,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경략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적국과 전쟁을 도모할 것이다.

¹³⁵ 동아일보, 2005년 9월 14일.

¹³⁶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국방부, 2003), p. 226.

력을 고려한 역할분담을 점진적으로 혁파하여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에도 독자적 방위충분전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 업무를 한국군이 인수하되, 첨단 기술화된 전력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 이는 미군이 운용하던 것을 인수·대체할 경우 확충되어야 할 무기체계 및 장비소요가 오히려 군의 전력구조 개선 및 장기적 발전방향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정보획득체계 및 C4I체계, 장거리 타격체계 및 해상·공중 작전체계의 상대적 취약성 극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¹³⁷

특히 미국에 의해 혁명적으로 발전된 군사변환 전략은 첨단과 학무기를 이용한 비선형적 첨단전을 지향하는 군사혁신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사변환의 주요 내용은 정보·군사결정의 우위, 정밀타격, 군사력 신속투사, 전술적 신속성, 군대 방어력 제고, 지상·해상·공중·우주 전장 지배능력 확보 등이다. 따라서 우리 군도 무기체계나 장비획득에 있어서 미래전 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군이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비대칭적 전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정보화전력 위주로의 국방개혁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보편적 추세로서 RMA 전력에 기반을 둔 미래전 양상을 참작하여 정보화전력 육성 위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국방개혁이 북한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 잠재적 외부위협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무기체계나 장비 구입 시 잠재적 외부위협 억제 여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충

¹³⁷ 노훈·고영우, “우리 군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추진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65호 (2004 가을), pp. 118~119.

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의 역할분담에서 미군은 공군과 해군의 역할에 치중하고 한국군은 육군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동아시아 지역 잠재적 위협이 어떠한 형태로 폭발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군의 군비태세는 대륙세력 및 해양세력 모두를 견제하는 3군 균형 발전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3군 균형발전은 세력균형이 파괴되어 향후 동아시아 정세가 분쟁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동맹관계 조정·구축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은 전력 확충 이외에도 전력의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핵심사항으로 전략기획 및 작전기획과 전투발전에 관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군의 전략기획 및 작전기획 분야는 거의 미군에 의해 독점되어 운영영역으로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탈냉전 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미 양국의 안보이익은 서로 상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위협에 대한 평가도 상이할 수 있다. 전투발전도 미국의 영향 아래 원정의 형태로 전쟁을 치루는 미국 특유의 환경이나 여건에서 생성되어 우리의 여건에는 부적합한 미국식 교리, 평성, 훈련 등의 전투발전 요소가 도입되었다.¹³⁸ 따라서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서 비롯될 수 있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독립적으로 한국군은 북한 이외에도 미·일·중·러 등 모든 가능한 주변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기획 및 작전기획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국은 전력투자 사업이 시작된 1974년부터 2003년까지 전력

¹³⁸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p. 228.

증강사업에 총 약 68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하였다. 전력증강 사업비 지출액은 동 기간 국방비 총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군 전력의 핵심 무기체계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완성품을 직구매하여 조달해 왔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적 핵심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도 유도해 내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조기전력화의 필요성이 너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군과 해군전력의 핵심기술의 해외의존이 심화된 것은 첨단 방공능력과 해군전력을 미군이 맡는 한·미동맹 체계에서의 비대칭적 역할 분담에서 비롯되었다.

국방비 관련 연구개발비는 핵심 첨단 군사기술 연구는 커녕 기존장비 개선에도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비 배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에서 2003년 4.5%로 증가했으나, 미국 13%(2001), 프랑스 13%(2001) 등에 비교해 볼 때 극히 낮은 수준이다.¹³⁹ 따라서 동아시아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국방비의 10% 수준 이상으로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방산업체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라. 외재적 균형화전략

(1) 한·미동맹 체계 변화

비대칭적 동맹의 전형으로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더불어 이에 대한 한·미동맹의 안보태세는 미국중

¹³⁹ 위의 책, p. 213.

심으로 준비·추진되는 등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안보환경 인식 및 전략변화를 답습해 왔다. 따라서 경성동맹체제에서 미국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한국에게 자신의 군사전략적 선택을 수직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미국 국익 추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한·미동맹 관계는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동맹의 안보딜레마’(alliance’s security dilemma)¹⁴⁰를 초래한다. 미국의 안보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안보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방기”(abandonment)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안보환경 인식 및 전략변화를 답습해 왔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시 자국의 국익에 반하여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전략으로서 NATO와 일본을 기본 축으로 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가볍게 평가했고, 동북아의 현상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군사충돌을 무릅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였다. 동맹안보 딜레마 포기의 위험성은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하였던 미군을 1949년 완전 철수하였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2/7사단 병력만 남기고 철수하였으며, 1969년 닉슨독트린 선언으로 제7사단 병력 철수를 단행한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에는 1992년 7,000여 명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인 GPR에 따라 주한미군 부분 감축 및 재배치 등이 이루어지는 등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

¹⁴⁰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97), pp. 180~199.

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신뢰가 저하되어 방기의 두려움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동맹안보 딜레마 가운데 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다른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중·미 분쟁에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저지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을 약화시켜 “방기”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우리정부의 노력에 맞대응한다. 따라서 동맹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방 현대화를 통한 내재적 균형화(internal balancing)를 도모하거나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안보위협 약화를 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한·미동맹이 지니고 있는 포기의 위험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패권적 균형자로서 현상유지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역패권 능력 향상을 저지하기 위한 현상타파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므로 전진기지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이 향상되었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일본 다음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 따라 한반도 지역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 연루되는 동맹의 안보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 월남전 파병, 최근 이라크전 파병 등은 동맹의 연루 위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4년 북한 핵위기 시에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정밀폭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3년 공개된 핵 태세 보고서에

서 미국 부시 행정부는 중국, 북한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005년도 개념계획 5029 논쟁이 시사하듯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국의 북한 공격이 전쟁 상황으로 비화되거나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북·미간 갈등이 전쟁 상황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한국이 한·미동맹의 구조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이다. 향후 한·미동맹은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인 분쟁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중 패권전쟁에 연계되는 “연루”의 위험성도 상존한다. 한·미동맹 강화로 인해 미국의 공격적인 무기가 한반도에 반입된다면 한반도의 미군기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된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강화는 미·중 패권경쟁을 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선 미·일동맹 강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질 수 있는 한·미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안보딜레마를 초래하여 한·미·ds일 삼각동맹에 대한 대항동맹 구축을 야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의 제2의 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중국전제를 위해 동아시아에 MD 구축을 위해 이지스함,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신형 무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GPR에 따라 기동력 강화를 위한 첨단무기들의 유입과 배치가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시키는 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폐기하려

고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과의 조어도 분쟁 등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패권주의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미국의 현상타파적 동아시아정책을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미국 측에게 전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이 우리의 제안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공격적 동아시아정책 수행에 필요한 한·미동맹 체계를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현상타파적 전략 수정을 일정 부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먼저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억지를 위한 순수한 방어동맹에 한정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은 대북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7-04”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순수 방어동맹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armed attack)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조약의 발동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리적 범위도 조약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로 제한하고 있는 등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한정된 방어동맹(defensive alliances)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 내지 중국 견제를 위한 패권동맹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¹⁴¹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미국은 1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¹⁴¹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변화하고 있고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미 8군 사령관의 발언(한겨레신문, 2004년 5월 26일)은 한·미동맹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동맹군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 이외의 다른 군사작전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려고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을 넘어서 대만분쟁, 미·중 패권전쟁 등에도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시사한다.¹⁴²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자연적으로 지역동맹으로의 성격 변화를 가져와 한국은 ‘동맹의 안보딜레마’의 연루 위험에서 탈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미국 측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을 대북억지를 위한 순수한 방어동맹으로 한정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한·미동맹을 중국봉쇄 및 선제공격을 위한 패권동맹 또는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정부는 미국 측에게 한·미동맹의 개편이 한·미동맹의 이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공통이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함으로써 단순히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미·중 간 세력균형을 도모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에 내재되어 있는 동맹의 안보딜레마는 한·

¹⁴²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인정하되,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군사작전이 한국의 안보를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의 사용여부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 결정’토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박건영 교수가 주장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을 위해서도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경우나 북한 정권 붕괴 시 중국의 북한 접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 유리한 예방적 보장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 2005년 9월 13일.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미국이 수용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대만분쟁, 중국견제를 위한 예방전쟁 등에도 그 목적이 주어질 있기 때문이다.

미동맹의 비대칭적 성격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비대칭동맹은 흔히 ‘안보·자주성 교환동맹 모델’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¹⁴³에 의해 그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 비대칭적 동맹에서 안보와 자주성의 교환이란 약소국이 동맹 상대국으로부터 안보를 제공받는 대신, 자국의 안보정책 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자율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특수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보·자율성 교환동맹 원리에 따라서 한국은 대북억지력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대신,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에게 이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자주성 교환원리가 작동된다면 한반도 및 주변 안보정세 인식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한국의 견해는 반영되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은 자신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고 미·중 패권경쟁이 갈등 및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우리의 주권과 국익은 희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세적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 측에게 요구해야 하며, 한·미연합사 체계를 미·일동맹의 경우처럼 병렬형의 수평적 협력체계나 NATO와 같이 평시에는 자국군대를 유지하다가 전시에 통합사령부를 구성하는 형태 등으로 개편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공격적 패권동맹에 적극 동참할 경우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되어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미국 진영으로

¹⁴³ J.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on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장노순,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 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6), pp. 79~104 참조.

힘의 편중 현상을 야기하여 북한 핵문제, 대만문제, 영토분쟁 등에 있어서 미국의 선제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 동아시아정책은 중국에 대한 선제 예방전쟁까지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상은 한·미동맹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어동맹에 머물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즉, 우리 군은 한·미동맹이 방어동맹 내지 동아시아 안정자로서 역할을 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동아시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동맹전략은 한·미동맹 체제를 보다 수평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개혁함으로써 동아시아 기동군화를 지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성격의 수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현상타파적 패권동맹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를 저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반패권동맹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는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정자로서 동아시아정책을 수행할 경우만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통일 및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 우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현상타파적 동아시아정책을 수행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은커녕 생존(survival)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동맹전략은 자주 국방력 증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군사장비 출입에 관한 한국의 통제능력의 제도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도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의 동아시아 지역군화를 방지하고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동맹에 국한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동맹전략이 실패할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략 환경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 구축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중이 패권경쟁을 현상유지 차원에서 연성권력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이를 미·중에게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상황으로 발전할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세안 국가들을 전략적 협력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들은 식민지 지배 경험으로 인한 국가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영토 존중 등을 지향하는 경향과 함께 미·소 냉전 속에서 소련, 미국 등에게 적대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 등 비동맹을 지향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¹⁴⁴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패권경쟁이 갈등 및 분쟁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특정국가에 편승하기 보다는 양대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강대국 논리인 패권안정론에 입각한 강대국 편승론을 거부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국가

¹⁴⁴ Chung-In Moon and Chaesung Chun, "Sovereignty: Dominance of the Westphalian Concept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들이 주도하여 창설한 다자안보대화협의체로서 ARF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994년 발족한 ARF는 동아시아 유일무이한 지역안보문제 토론기구로서 자리를 잡았으나, 신뢰구축조치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는 등 지역안보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력이 부족한 비효율적인 논의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¹⁴⁵ 즉, ARF는 동아시아 영토분쟁, 군비증강 등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에 대해서는 강대국들을 의식해서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동아시아 다자안보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ARF가 지역안보를 위해 신뢰구축 조치, 예방외교의 개발 및 이행, 군비축소 등에 관한 행동규약을 제정하도록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대국들이 현상타파 전략을 자제하도록 행동규약을 정해야 한다. CSCE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NATO와 WTO의 다자동맹 위에서 다자안보협의체로서 CSCE가 형성되었고 기존의 국경선 인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축소 등의 현상유지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핀란드, 스위스 등의 유럽의 중립국들이 NATO와 WTO 양측이 대립할 때 중재역할을 하여 타협을 유도한 것처럼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24개 회원국을 지닌 ARF를 CSCEA(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ast Asia)로¹⁴⁶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동아시아 안보협력회의

¹⁴⁵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2005), p. 254.

(CSCEA)가 형성되면 이 기구는 단순한 회의체 성격을 탈피하고 상설화된 사무처를 중심으로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등을 정례화하여 신뢰구축, 예방외교, 군비축소 등을 실행에 옮겨서 미·중 패권갈등 등의 역내 안보위협을 완화시키고 점차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말라카 해협은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의 일반 상품수송로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국가들의 석유수송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말라카 해협은 향후 미·중 패권경쟁의 분쟁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말라카 해협에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군의 말라카 해협 주둔에 대비, 태국 말레이 반도 나부에 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주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국의 병력 파견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¹⁴⁷ 따라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말라카 해협이 미·중 패권경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이해관련국들 모두가 참여하는 「말라카 공동관리위원회」구성을 제의함으로써 미·중 패권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안정된 안보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안보·평화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안보 전문가회의를 심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민간차원의 안보대화·협력기구 회원국으로는 미·중·일·러 등의 강대국 이익을 반영하는 민간전문가들을 배제함으

¹⁴⁶ 한용섭,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조건, 과제 그리고 전망,”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p. 329.

¹⁴⁷ 황병무, “중국의 입장,”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pp. 130~131.

로써 미국과 중국의 공세적 동아시아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평화촉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 안보협력 및 평화촉진에 관한 민간차원의 제안을 국제사회 및 동아시아 지역 사회에 담론화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국제여론의 압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¹⁴⁸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한국은 강대국정치의 소산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의 피해에 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역사교과서에 수록, 동아시아 평화운동 및 평화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현상타파적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미·중 관계를 분쟁상태로 몰고 갈 경우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동맹관계 및 군사적 제휴관계를 수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해양세력으로서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대륙세력으로서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적 제휴관계, 북한과는 군사동맹관계를 갖고 있다. 한반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국가들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리적 중간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는 양대 세력이 지정학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동남아 지역은 석유, 상품 등의 주요 해상수송로를 두고 양대 세력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중요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관계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긴장완화에 일조할

¹⁴⁸ 동북아협력대화(NEACD),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 기존의 민간 안보대화 기구나 반관반민 안보대화기구에 참여한 미·일·중·러 등 강대국들이 자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여 역내 안보관련 공동합의 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pp. 171~262.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실질적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태지역 분쟁방지 중립동맹」(Neutral Alliance for Protecting Conflicts in the Asia Pacific)을 창설하여 미·중 패권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중에 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반패권 동맹을 적극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반패권 중립동맹 구성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인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면, 반패권 중립동맹의 위상은 보다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에 대한 논의는 크게 ‘낙관적 시각’을 지닌 자유주의론자들과 ‘회의적 시각’을 지닌 현실주의론자들로 나누어진다.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는 힘의 균형과 그 평형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현실주의자들은 동아시아 미래를 회의적으로 예측한다.¹⁴⁹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구조적 무정부 상태인 국제체제에서 국제정치의 지배적인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들이 권력(power) 및 안보(security)로 정의된 국가이익을 추구하여 불안정과 갈등으로 국제정치질서가 구성되어진다. 또한 국제정치 질서는 개별 국민국가의 국력 수준에 의해 서열화되어 있으며, 세력의 대소에 의한 권력의 국제적 배분 결과가 국제질서는 물론, 협상의 결과와 국제레짐의 변화를 결정한

¹⁴⁹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pp. 5~24; Barry Buzan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 이에 따른 세력분포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단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힘의 다극화 현상을 가져와서 국가들 간에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불안정 요인이 작용하면서 안보 딜레마, 오인의 문제 등으로 갈등 및 대결 등의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공격적 대외적 관계는 사회·경제적 모순성이 민족주의적 정서와 결합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현실주의론자들은 급속한 경제력 증대를 바탕으로 군사력이 팽창하고 있는 중국이 기존조약의 변경, 영토분쟁,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증대 등 자신의 세력분포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장차 아시아에서 현상변경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중국과 같은 도전국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균형화정책 및 봉쇄정책을 미국, 일본 등이 취하면서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예측불허 상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세적 현실주의자인 미어세이머는 “만약 중국의 경제발전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이 경우 새로운 모습의 세력균형 구조가 나타날 것이며, 중국은 잠재적 패권국이 될 것이다…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할 경우 동아시아의 국제구조는 불균형적 다극체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는 현재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다.”¹⁵⁰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탈냉전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지역패권을 다투는 불균형 다극체제(Unbalanced Multipolar System)로

¹⁵⁰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 비극, p. 729.

보면서 냉전시기 양대진영으로 대치하였던 양극체제보다 전쟁 가능성이 높은 국제체제로 간주한다.¹⁵¹ 특히 세력분포가 균일하거나 최소한 체제 내의 2대 강대국이 힘이 비슷하여 지역패권을 도모하는 강대국이 없는 균형적 다극체제(Balanced Multipolar System)보다 지역패권을 다투는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불균형 양극체제(Unbalanced Bipolar System)가 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고는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현상타파적 동아시아정책을 제어하고 한·미동맹을 동아시아의 방어적 안정자 역할로 국한시키는 대내·외적 균형화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논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가 균형적 양극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전환 가능하더라도 동아시아는 국가정체성, 집합정체성이 상이한 “적대적인 흡수적 무정부” 상태 아래에서 “적대적 세력균형”(adversarial balance of power)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이고 흡수적인 무정부 상태의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우호적인 로크적 무정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균형도 “친화적 세력균형”(associate balance of power)¹⁵²으로 변모해야 한다. 알라가파(Muthiah Alagappa)의 국제질서의 유형론¹⁵³에 의하면 동아시아는 세력균형, 동맹, 자력구제 등의 원칙

¹⁵¹ 다극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Kenneth N. 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 93, No. 9 (Summer 1964), pp. 881~909; John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pp. 13~18.

¹⁵² R. Little,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5 (1989).

¹⁵³ Muthiah Alagappa,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der: An analytical

에 의한 현실주의적 도구적 질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도구적 국제질서(instrumental order)는 흡스적 적대적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을 목적으로 국력과 영향력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패권, 세력균형, 강대국간 협조 등을 기본으로 국제레짐을 보조적 수단으로 질서를 형성한다. 동아시아의 이러한 현실주의적 도구적 국제질서는 “규범·계약적 국제질서”(normative-contractual order)로 변환되어야 한다. 규범적 국제질서는 국가의 목적을 생존을 기본으로 하지만, 평화 및 전쟁방지 등을 추구하면서, 경제통합 추진, 집단안보협의체 구성, 강대국간 협조체제 및 조정된 세력균형(contrived balance of power) 체제 구축 등을 기반으로 규범, 규칙 및 국제법을 존중하고 힘의 종합적 관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규범·계약적 국제질서는 1970년 이후 유럽에서 지배적 형태의 국제질서로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모든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 질서 형태로 평가한다.¹⁵⁴

Framework,”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2003), pp. 42~43.

¹⁵⁴ 가장 이상적인 국제질서는 “구성주의적·연대적 국제질서”이다. 이 질서에서는 국민국가적 정체성과 목표가 집합적 정체성과 집합적 이익에 의해 대치되고 이에 종속된다. 또한 공동체의 목표로서 전쟁을 영원히 제거하고, 경제적 복지를 추진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한편,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동체를 확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질서는 아직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적이 없다.

〈표 III-1〉 국제안보질서의 유형

	현실주의적 · 도구적 질서	자유주의적 · 규범적 질서	구성주의적 · 연대적 질서
질서의 성격	기초적이고, 편의적이며, 임시적인 질서; 고위정치층 중심으로 하며, 국제법의 규칙에 좌우되지 않음;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힘이 중요함	복합적이고 안정적임; 대부분의 국제관계가 규범, 규칙, 타자에 대한 의무감에 의해 성립됨; 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슈영역이 제한됨	상호신뢰와 일반적인 의무감에 기초하여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룸; 모든 국제관계가 국제법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짐
질서의 영역	국가간 차원에 한정된 질서로 모든 권위는 국가에 종속됨;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이 최소화되어 있고, 인권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국제행위는 최소화됨	국가간 차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는 아님; 국내문제에 대한 주권평등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준수됨; 국가간 합의에 의한 인권개입이 발생함	국내외 문제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음;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국내문제에 국제적 간섭이 용인됨; 개인도 국제기구에 직접 호소할 수 있음
정체성	국민국가 정체성, 힘, 이익의 요소가 지배적임; 상호이익에 기반한 국제제도만이 기초적인 협조와 공존을 가능케 함; 집합정체성, 집합적 이익이 부재	국민국가적 정체성이 지배적이지만 상호이익에 기반한 관계가 형성됨; 상호이익이 더욱 중요해 지며 집합적 정체성과 집합적 이익이 출현하기 시작함	국민국가적 정체성과 목표가 집합적 정체성과 집합적 이익에 의해 대체되고, 이에 종속됨
목적	주요 목적은 생존, 국력과 영향력 확대와, 국제체제의 보존, 이차적 목적은 소유권 존중, 합의 준수, 폭력행사 제한, 평화	국가의 목적은 생존, 국력증강, 경제성장과 발전, 집단의 이익은 평화, 전쟁방지, 안정적인 환경, 폭력행사 제한, 집단의 보존과 복지, 안정적인 경제체제	공동체의 목표로서 전쟁의 영원한 제거, 연대와 통합의 목적을 공고화, 경제적 복지의 추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 공동체의 방어,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동체를 확산
규칙의 종류와 기능	관습과 조약에 근거한 규칙으로 도덕적 내용은 부재; 주요 기능은 공존을 보장하면서 해로운 결과를 방지함	명확하고, 공식적이며,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되는 규칙이 존재하며 도덕적 내용도 일부 존재; 협조와 공존을 촉진시키며 해로운 결과를 방지함	공동의 도덕적, 규범적, 법적 인들에 기반한 규칙이 존재함; 규칙들은 협조, 통합,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시킴
질서 형성의 방법	권력의 배분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주요 방법은 패권의 존재, 세력균형, 강대국간 협조체제 등이 있고, 이차적인 방법으로 국제레짐(군비통제, 갈등 회피 등)이 존재함	규칙, 규범, 규칙과 국제법, 힘의 집합적 관리 등을 강조함; 주요 방법으로는 경제적 협조, 국제레짐, 집단안보, 그람시적 패권, 강대국간 협조체제, 조정된 세력균형체제 등이 존재함	신뢰와 상호 의무가 질서의 기초를 마련함; 주요 방법으로는 민주적 공동체의 공고화와 확장, 경제적, 정치적 통합, 국제레짐 등이 존재함
질서의 도구	전쟁: 정책의 정당한 도구이며, 전쟁의 근거에 대해 제한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전쟁의 실제수행에 관해서 규칙이 존재함 외교: 차이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주요 수단임 국제법: 평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중요하나 정치적 차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중요하다 할 수 없음	전쟁: 전쟁에 대해 제한된 근거만을 부여하며 집단간 관계에 있어 무력의 역할은 제한됨 외교: 규칙의 교섭과 집행에 있어 주요 수단임 국제법: 국제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 법을 포함한 원칙, 규범, 규칙을 강조함	전쟁: 공동체내의 관계에 있어 사용되지 않고, 공동체 외부의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됨 외교: 합의에 이르는 교섭과 집행과정에 있어 주요 수단임 국제법: 공동체의 모든 행위가 규칙에 의해 규제됨

자료: Muthiah Alagappa,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der: An analytical Framework," pp. 42~43.

흡스적 무정부 상태, 적대적 세력균형, 도구적 국제질서 등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로크적 무정부 상태, 친화적 세력균형, 규범·계약적 국제질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이 중위국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동아시아에서 조정된 세력균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강대국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공동체 및 공동안보에 입각한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웨스트팔리안 주권국가에 의거한 국민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지만, 협력에 따른 상호이익(mutual gain)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적 집합적 정체성 및 집합적 이익이 출현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이익에 기반한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출현되고, 협력에 의거한 집합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교류·협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역내의 집합적 정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식인 및 시민사회에서의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정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국가간 협력을 통해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가져오는 ‘평화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이 역동적으로 증대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증대될 것으로 분석된다.¹⁵⁵ 이는 국가간 협력으로 인한 경제협력 및 상호의존성의 증

¹⁵⁵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Ming Wan, “Wealth and Power: Economic Transformation of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pp. 20~21 & 69; James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No. 38 (Winter 1994/95), pp. 28~39.

대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은 증진되는 반면, 전쟁비용은 더욱 증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시장경제가 제도화되고, 지역경제협력이 심화되면 영토분쟁, 과도한 민족주의 분출로 인한 분쟁이 일정 부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유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 민주주의 확산 및 이 지역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다자 조직 및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예컨대 한·일 FTA, 한·중 FTA를 실현시킴으로써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중·일 FTA, 한·중·일 FTA의 추가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FTA 추진은 외교안보적 불안정성, 경제발전 수준 격차, 중상주의적 민족경제적 관성, 배타적 민족주의 등의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단기 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직접 FTA를 맺기 보다는 동북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ASEAN의 AFTA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금융분야 협력을 활성화시켜 재발될 수 있는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한편, 역내협력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역내 기축통화 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제금융질서 개편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를 도출·개선해 나감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설립하여 단기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IMF, World Bank 등의 기능을 보완해줌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사회·경제통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

는 동북아공동체는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¹⁵⁶ 이는 아직 동아시아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문화적 동질성, 가치체계 및 집합적 정체성 형성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문화의 투과성이 강하고 서구지향적 정체성이 지배문화로 작용하고 있는 등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평화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을 국가적 차원의 고위정치(high politics) 수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민주시민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도 일정 부분을 할양해야 한다. 물론 평화적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국가주의 및 패권적 의도가 내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근대의 틀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근거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사회와 교통하는 탈근대적 인식 틀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국가이익과 지역 공동이익이 충돌할 경우 동아시아 시민사회 운동은 비록 성숙도의 차이가 있고 연대 경험도 일천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이익을 파괴하는 패권적 국가이익 추구전략을 규율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미·중 패권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평화정착을 구축하는 데 시민사회 연대를 강

¹⁵⁶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에 의해 제기된 아시아 통화기금(Asia Monetary Fund) 설립 구상은 미국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조하는 “동아시아 시민사회 평화연대” 등 상설회의체와 동아시아 시민단체들이 지역적 수준의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동아시아 시민연대 기구를 동시에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¹⁵⁷

향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지역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내국가들이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공동의 유대감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중반기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치렀고,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최근 역사교과서 논쟁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웨스트팔리안 주권국가 개념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국가 정체성을 상호이익에 기반한 집합적 정체성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학자,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일반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도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의 국제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시민사회 연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비공식적 연계망(informal network)이 보다 많이 구축되어 동아시아 평화문화가 육성되고, 이는 다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성숙된 동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는 개별 국가들의 패권적 국가중심 전략을 제어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패권적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국제질서로부터 점진적으로 친화적 세력균형이 구현된 규범·계약적 국제질서로 발전시킬 것이다.

¹⁵⁷ 이희옥,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362.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구성주의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최소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또 다시 미국의 현상유지정책이 긴요하게 요구된다. 냉전시기 유럽의 사례가 시사하듯이 무역, 투자 등의 경제교류·협력은 전략적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패권안정적 국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 간 급속한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세력균형이나 패권체제가 위협당할 경우 국제무역 및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다.¹⁵⁸ 또한 교역구조가 불평등할 경우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될지라도 교역 상대국간에 상호의존이 증대되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석유와 같은 전략적 자원과 해로의 확보 필요성은 모두 핵심적 안보이익으로 치부하고 있으므로 힘의 사용을 종종 정당화시킨다. 어느 일방이 핵심적 안보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상대국과의 경제관계가 아무리 긴밀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키려 할 것이며, 때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는 명제는 경제적으로 높은 상호의존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던 상황,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시기에서도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¹⁵⁹ 더욱이 유럽에서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패권전쟁을 설명

¹⁵⁸ Ralph A. Cossa & Jane Khanna,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April 1997), p. 224.

¹⁵⁹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 비극, p. 679.

할 수 없다. 냉전의 종식으로 국제정지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어 동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의 향후 국제정치적 사항은 모두 평화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극히 유럽 지역에 한하여 예측 가능한 것이지, 최근 미·일동맹 강화, 중국을 겨냥한 MD 개발, 중앙아시아 미군배치 등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미국이라는 패권적 역외균형자(hegemonic off-shore balancer)의 존재,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위상이 확립되어 있는 NATO를 토대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이를 통해 유럽지역의 평화가 유지·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유럽의 경제협력은 유럽연합(EU)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 즉, 자유주의 낙관론의 이론적 대상이 되었던 (서)유럽의 사례는 지극히 미국이라는 패권적 균형자에 의해 세력균형이 조정·관리되는 현실주의적 기반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구성주의적 방법론의 인식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균형적 양극체제로 변화시키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은 협력적 자주국방론과 동북아 균형자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균형적 양극체제가 나타나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태는 갈통이 일찍이 설파한 소극적 평화의 범주에 속한다.¹⁶⁰ 소극적 개념으로의 평화란 전쟁의 회피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으로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인 개념의 부정적 규정 방식을 의미한다.

¹⁶⁰ Galtung, J. "Peace Research: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Essays in Peace Research*, March 1990.

따라서 소극적인 개념에서의 평화는 폭력, 빈곤, 부자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극적 평화 개념은 역사적으로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계대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이러한 평화 개념에서는 평화와 휴전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의 취약성은 집단적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규정짓기 때문에 모든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상태(status quo)를 정당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평화가 구현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흔히 국가 정체성, 집합정체성이 상이한 “적대적인 흡스적 무정부” 상태 아래에서 “적대적 세력균형”(adversarial balance of power)이 형성된 경우이다. 이러한 국제질서에서는 규범, 규칙 등보다는 힘이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 동력이 된다. 따라서 적대적이고 흡스적인 무정부 상태의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우호적인 로크적 무정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균형도 “친화적 세력균형”(associate balance of power)¹⁶¹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동아시아에 친화적 세력균형이 존재할 경우 비로소 공동안보 또는 협력안보에 의거한 “적극적 평화” 영역이 출현될 수 있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은 사회정의를 구현되고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국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평화로 규정한다. 즉 사회정의, 민주적 질서, 국가간 협력 등이 충족되면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사라져서 인권 보장, 경제발전, 민주적 참여 등의 평화의 적극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 평화적 국제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¹⁶¹ R. Little,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5 (1989).

“친화적 세력균형”에 입각한 “규범·계약적 국제질서”(normative-contractual order)가 구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제질서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의 필요조건은 현 단계 양극체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자주국방력 확충, 한·미동맹 체계 변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유대 강화 등 우리정부의 균형화전략이며, 충분조건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 상호간에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시민사회 연대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방안을 개발·추진하는 것이다. 적절한 균형화전략 없이 추진되는 기능주의적 동아시아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균형화전략만 존재하는 동아시아정책 역시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질서를 보장하는 연대적 질서를 창출해 낼 수 없다.

IV

결론

본 연구는 우선 탈냉전 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미·중 패권경쟁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는 미국의 패권이 반영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단극체제로 이해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국제질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점차 불안정한 양극체제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 국력의 급격한 신장은 미국중심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에 의해 힘입은 바 크다. 미국중심의 국제경제체제는 영국중심의 국제체제보다 훨씬 빠른 경제적 불균등 성장(uneven growth)을 가져오는 구조적 특성에 편승하여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과의 세력 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있는 중이다.

미·중 간 빠른 세력전이는 세계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질서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9세기 후반 GDP 규모에 있어서 후반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미국은 독립문제, 남북전쟁 등 국내문제를 일단락 짓고 20세기 전반기부터 점차 세계정치 무대에 강대국으로 등장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독일, 일본, 소련 등의 도전에도 굳건히 버티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제1위의 GDP 규모, 첨단기술 선도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 방어하기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미국적 가치 등을 기반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탈냉전후 급속하게 진행된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하여 우선 미국은 경제규모에 있어서 중국의 도면에 직면하게 되었고, 2010년 전후에는 처음으로 세계경제 1위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중 간 세력전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세력전이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력 경쟁은 가치적 측면에서 자기중심적 정체성을 압도적으로 보이고 있는 미국의 예외주의(exceptionalism)와 중국의 중화주의에 의해 가일층 강화되어 예측불허의 패권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 일본, 소련 등이 미국 패권에 대해 도전한 경우와는 달리 경제적 부상에 기반한 중국의 도전은 미국의 대중정책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은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었던 독일, 일본 등의 도발전쟁에 대해 강력한 응전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패권도전을 제압했다. 경제력이 뒤떨어진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해서는 봉쇄정책 및 동맹외교를 통한 균형화전략과 다자안보협약체 형성을 통한 연성권력 행사를 통해 소련 붕괴를 유도해 냈다. 그러나 향후 중국은 독일, 일본, 소련 등과는 달리 세력형성요소로 가장 중요한 경제력 규모에 있어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제력을 토대로 국방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미·중 간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중국의 패권도전을 제압할 만큼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

이러한 미·중 권경쟁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의 대중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시절 중국의 민주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하고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봉쇄정책 또는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미래의 패권도전 잠재국 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전략, 미·일동맹 등 동맹우선정책,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우위 확보 차원에서 대중국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정책에 대해 중국은 기존의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가 지니고 있는 생산력 이전효과를 십분 이용하고 중국 위협론의 예봉을 꺾기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의 대중견제 및 미래의 패권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현대화를 통한 균형화전략(balancing)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해서는 다극화전략에 기반한 동반자 외교를 통해 세력균형(balancing)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동아시아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균형적 양극체제, 미국 또는 중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변화시킬 것이다. 물론 불균형적 양극체제가 미국중심의 일초다강체제로 환원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미국중심의 불안정한 패권안정 구도에 입각한 불균형적 양극체제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미·중 간 세력전이와 심화됨에 따라 균형적 양극체제로 가거나 중국중심의 패권안정 구도로 전환되기 쉽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의 발전추이는 현재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패권경쟁 --> 예방전쟁 등의 수순으로 변화되든가, 패권경쟁 --> 전략적 동반자 --> 도발전쟁 등으로 전이, 또는 패

권경쟁 --> 전략적 동반자 --> 미·중 균형적 양극체제 및 안보 공동체 형성 등으로 전환되는 3종류의 경로 중의 한 시나리오를 밟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3종류의 시나리오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가장 유리한 경로는 패권경쟁 --> 전략적 동반자 --> 미·중 균형적 양극체제 및 안보공동체 형성 시나리오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예방전쟁, 도발전쟁 등으로 발전된다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이나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상의 안보이익은 미·중 패권경쟁의 경로가 불균형적 양극체제에서 균형적 양극체제로 발전해나가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공동 협의하는 안보공동체를 형성하여 친화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규범·계약적 국제질서”(normative-contractual order)를 구축해나가는 것에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이 형성될 경우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안보·경제 이익을 중재하는 중심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미·중 패권경쟁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 유형에 따라 우선적으로 규정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방향성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대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중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체제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하여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는 급진

적 수정주의 전략(revolutionary revisionist strategy)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는 전쟁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극도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또는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상태로 산업화를 지속하지만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으로 이를 방지할 경우 한반도 안보는 거대 중국의 ‘프랑켄스타인’적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한반도 안보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편승전략이 유효한 전략으로 거론되지만, 이 전략은 미국이 동아시아 현상타파를 도모할 경우 세력 불균형을 심화시켜 미국의 대중 예방전쟁 및 대리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편승전략은 동맹안보 딜레마의 연루 위험을 강화시켜 미·중 패권전쟁에 연루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는 반대로 한반도 평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다자안보협약체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균축, 북·미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철수 등의 한·미동맹의 유연화전략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는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정책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다. 더욱이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반도 중립화론은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중립화가 국제적으로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변화가 생기면 이러한 보장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미·

중 패권경쟁이 균형적 양극체제 및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친화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은 각 진영 내에서 패권적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현상유지 정책을 도모하는 동시에, 군사력에 의거한 경성권력 행사가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등의 연성 권력 행사에 의해 패권경쟁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당분간 지배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이며,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미국은 비대칭적 세력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동 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 추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지속할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미사일방어 계획 추진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현상타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현상타파가 아닌 현상유지 전략으로 유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균형적 양극체제로 전환되도록 온갖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경우 패권경쟁이 패권분쟁으로 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중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안보전략은 동아시아 균형자 역할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고려는 내재적 균형화전략이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걸 맞는 국방력 증강을 통해 미래의 세력경쟁의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 불균형적 양극체

제에 내재되어 있는 전략적 불균형을 균형상태로 잡아주는 역할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내는 기능을 수행해 내야 한다. 특히 자주국방에 부응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수입대체화가 긴급하게 요구된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자체적 군비 증강을 추진하여 방기와 연루의 동맹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가안보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자주적 안보역량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의 현상유지적 동아시아 정책을 유인하고 한·미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동맹이 아니라 방어동맹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구조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 억지 및 동아시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주한미군의 군대 이동 통제 등 각종 통제장치를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미·중 패권갈등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이 어려운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유일무이한 안보협의체인 ARF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의 평화교육 및 운동을 적극 지원하거나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민간단체들의 평화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 안보전략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동아시아 평화 담론 구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

시아의 흡수적 형태의 “적대적 세력균형” 상태를 로크적 형태의 “친화적 세력균형” 형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역내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결정을 고위정치(high politics)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도 상당 부분 할양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촉진시킬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역내 국가들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민족국가 중심의 주권개념 및 배타적 국익추구의 가치정향성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서로 FTA를 체결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키고 협력으로 인한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미·중 패권경쟁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을 평화적으로 유도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적 국제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친화적 세력균형”에 입각한 “규범·계약적 국제질서”(normative-contractual order)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질서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의 필요조건은 현 단계 양극체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자주국방 및 한·미동맹 체계 변화 등 미·중 패권경쟁을 중재할 수 있는 균형자적 역할에 입각한 균형화전략이다. 미·중 패권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사회·경제·문화적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이며,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 상호간에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시민사회 연대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방안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적절한 균형화전략 없이 추진되는 기능주의적·구성주의적 동(북)아시아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현실주의적 균형화전략만 존재하는 동(북)아 정책 역시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연대적 질서를 창출해 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중 관계가 패권경쟁 --> 전략적 동반자 --> 미·중 균형적 양극체제 및 안보공동체 형성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경쟁이 갈등국면으로 발전되면 한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분명한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패권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중위국으로서 한국은 강대국 세력경쟁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관계가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패권경쟁 --> 예방전쟁 등의 수순으로 변화되든가, 패권경쟁 --> 전략적 동반자 --> 도발전쟁 등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대비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에 화해협력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채 미·중 간 예방전쟁 및 도발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이다.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전쟁 및 도발전쟁 등 미·중 패권전쟁이 발발한다면,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진영에서 다시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균형화전략,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추진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남북한간 과제는 한반도 조기 통일이다.¹⁶² 한반도 통일은 앞에서 언급한 미·중 패권경쟁에 의한

¹⁶² 미·중 패권경쟁에 의한 고강도 분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치명적

미·중 관계의 모든 변화유형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반도 통일이 미·중 패권경쟁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균형적 양극체제 및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 등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 고양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의거하여 다양한 면에서 국익 확보가 용이해진다. 또한 패권경쟁이 전쟁 상황으로 변모될 경우에도 한반도 통일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패권전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가능성은 가일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반패권 중립화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중립화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패권전쟁에 참여한다면 냉철한 판단 위에서 패권전쟁의 승자 쪽으로 연대하는 것이 차선의 방안이다.

미·중 패권경쟁 초기단계에서 한반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남북간 평화·화해협력 기조를 우선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주변국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남북한만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 평화·화해 협력 기조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남북 화해협력 및 평화정착이 제도화되면 미·중 패권경쟁이 미·중 전략적 동

안보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논의는 대부분 과도한 통일비용 규모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거나, 북한과의 직접적 갈등 가능성 때문에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논의는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을 관리·제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있다. 한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상황으로 치닫한다면 남한과 북한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양 진영간의 패권전쟁에 참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위 안보논리의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한반도 안보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렵 개입 없이 조기 통일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반자관계를 통해 균형적 양극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교류협력 및 시민사회의 국제연대를 통한 안보공동체 구성으로 발전할 경우에도 미국의 현상타파적 동아시아정책을 현상유지 정책으로 변화시키고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규범적·계약적 질서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한 예방전쟁 및 도발전쟁의 경우에도 남북한 화해협력 기조가 정착되었다면 남북한은 모두 반패권 중립노선을 추구하여 남북한간의 직접적 대립은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는 미·중패권전쟁의 참화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이 대리전 양상으로 발전될 경우에도 남북한 화해협력 기조가 정착되었다면 한반도가 패권경쟁의 대리전 무대로 되는 것을 상당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의 안보문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체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권 확대 및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 점유 등의 미·중 패권경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미·중 패권경쟁에 의해 압도당할 경우 미·중 패권분쟁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화해 협력 구조 정착이 긴요하게 요구될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국방부, 2003.
- 김성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념과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2003.
- 셀리그 핸더슨. 이흥동 외 옮김. 코리안 엔드게임. 서울: 삼인, 2003.
- 손기웅. CSCE/ 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예츠청.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005.
- 윤덕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4.
- 이장훈. 홍군 vs 청군. 서울: 삼인, 2003.
-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국양서원, 2005.
-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출판사, 1992.
- 황병무. “21세기 동북아 지역질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교수논총. 37집. 국방대학원, 2004.
- _____. “중국의 입장.”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2005.
- Cordesman, Anthony.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Northeast Asia(CSIS), 2002.
- Everest, Larry. *Oil, Power and Empire*. Canada: Common Courage Press, 2004.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Handel, Michael. 약소국생존론. 김진호 옮김. 서울: 대왕사, 1995.
- Hirschman, Albert O.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 Foreign Tra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5/1980.
- Huntington, Samuel.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Johnston, Alastair Iai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halilzad, Zalmay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Force Posture*. Santa Monica: RAND, 2001.
- _____.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Rand: MR-1315-AF, 2001.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 Miller, Perry. *The Life of the Mind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 Harcourt Brace, 1965.
- Moon, Chung-In and Chaesung Chun. "Sovereignty: Dominance of the Westphalian Concept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 _____.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 1985.
- O'Hanlon, Michael and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A Brookings Institution Book. New York: McGraw-Hill, 2003.
- Organski, A.F.K.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 Pillsbury, Michael. *China: Debates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0.
- Singer, J. David and Melvin Small.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1816-198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February 1993.
-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77.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Wohlforth, William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Summer 1999.
- Wortzel, L. M.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 Power Status." *Orbis*. Vol. 38, No. 2, 1994.

2. 논문

- 강정인·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 중화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학회보 . 제40집 3호, 2000.
- 구갑우·최영중·박건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 제21권 제2호, 2005년 여름.
- 김우상. “미·중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 김태우.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한국군사. 2001년 1월호.
- 노훈·고영우. “우리 군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추진 방향.” 국방정책연구 . 제65호, 2004 가을.
- 백창제. “미국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2003년 제9권 1호.
-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 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1期).
- 윤영관. “패권국가와 국제정치경제 질서.”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 이삼성. “주한미군 전략의 변화와 한·미동맹 양식의 전략적 재검토.”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2005.
- 이수영. “중화민족주의와 중국의 대외정책.” 동아시아연구. 제4호 2002년.
- 이철기.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개편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2003년 가을.
- 이희옥.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

- 사, 2004.
- 장노순.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6.
- 장달중 · 임수호. “부시 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2004.
- 張文木. “科索沃戰爭與中國新世紀安全戰略.” 戰略與管理. 1999년 제3기.
- 전병곤.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화 구상과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2004.
- 한용섭.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조건, 과제 그리고 전망.”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2005.
- 홍용표.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의 이론적 틀.” 박종철 외.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제 형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Armitage, Richar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2000.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 Buzan, Barry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 Chan, Steve. “Exploring Puzzles in Power-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for Sino-American Relations.” *Security Studies*. vol. 13, No. 3, Spring 2004.
- Christensen, Thomas J. “Posing Problem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4, Spring 2001.
- Cossa, Ralph A. & Jane Khanna.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International*

- Affairs*. Vol. 73, No. 2, April 1997.
- Doyle, Michael W. "On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 Friedberg, Aaron.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 _____. "Asian Allies: True Strategic Partners."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 Galtung, J. "Peace Research :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Peace Research*. 3/1990.
- Goldstein, Avery. "An Emerging China's Emerging Grand Strategy, A Neo-Bismarckian Tur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eds. *Mastandun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No. 168, December 2001.
- Huntington, Samuel P.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 Krasner, Stephen D.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28, 1976.
- Kupchan, Charles A. and Clifford A. Kupchan, Concerts. "Collective Security, and the Future of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1, Summer 1991.
- Layne, Christopher. "The 'Poster Child for offensive Realism': America as a Global Hegemon." *Security Studies*. vol. 12, No. 2, winter 2002/3.
- Little, R.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5. 1989.
- Mastanduno, M. “Incomplete Hegemony: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Order in Asia.”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2003.
- Mearsheimer, John. “Back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 Morrow, J.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on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 Munro, Ross. “China: The Challenges of a Rising Power.”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 Nye, Joseph.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July/August 1999.
- Rice, Condolee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 Richardson, James.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No. 38, Winter 1994/95.
- Ross, Robert 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 Sagang, Scott 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s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
- Segal, Gerald. “East Asia and the ‘Constraint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20. No. 4, Spring 1996.
- T. R., Fox William. “Small State’s Diplomacy.” Stephen D.

- Kertesz and M.A. Fitzsimmons eds.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South Bend,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59.
- Taliaferro, Jeffrey.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2000/2001.
- Waltz, Kenneth N.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 93, No. 9, Summer 1964.
- Wan, Ming. "Wealth and Power: Economic Transformation of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 Wang, Hongyi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 40, No. 3, May/June 2000.

3. 기타자료

동아일보

연합뉴스

연합통신

연합뉴스

전경련 보고서. 중국의 석유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2004년 10월 7일.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1997.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2.

<<http://69.44.62.160/archives/pub/ftn/napsnet/oldpaps/heppel>>.

<<http://news.media.daum.net/foreign/asia/200506/07/chosun/v9267844>>.

html>.
<<http://www.seri.org/file/DB/2040403.pdf>>.
이태환. “중·미관계의 변화.” <<http://www.eastasianstudies.org>>.
Morrison, Wayne M. “China’s Economic Condition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November 19 <<http://fpc.state./document/organisation/10904.pdf>>.
Dumbaugh, Kerry B. “Taiw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Policy Choic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Updated September 28, 2001.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장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항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례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